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거품을 키우고 있을 뿐

정성진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교수

8월 21일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처로 대재앙을 막는 데 성공했으며, 세계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종료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미국 다우지수는 연중 최고치인 9천5백5를 기록했고, 8월 24일 코스피지수도 13개월 만에 1천6백을 돌파했다.

8월 21일 IMF는 한국 경제가 2010년 2.5퍼센트 성장한 뒤 2011년에는 5.2퍼센트의 고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 역시 지난 6월 한국 경제가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과연 이번 세계경제 위기, ‘대공황 2.0’은 벌써 끝난 것일까? 한국 경제는 정말 가장 빨리 회복되고 있는가? 우선 미국의 경우 불황이 이번 8월에 종식된 것으로 판명된다 할지라도, 2007년 12월 이후 그동안 무려 21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계경제 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즉 ‘대공황 2.0’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나아가 필자는 이번 세계경제 위기, 즉 ‘대공황 2.0’은 벌써 끝났기는커녕 여전히 초입 국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주요 국가 경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실물 경제의 실질적 회복이 아니라 ‘대공황 2.0’ 이후 각국 정부가 수행한 금리 인하와 구제금융·통화증발과 경기부양(미국에서만 약 12조 달러로 추산)에 힘입은 금융체계의 일시적 안정화이고 자산 가격(주가와 부동산 가격) 거품 현상이다. 최근 경제지표의 호전이 이른바 ‘실적 개선’(이윤율 회복)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거의 전적으로 대량 실업과 임금 삭감, 착취 강화에 힘입은 것이다.

▶ 3면으로 이어짐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고통 전가 정책이 부자 천국 서민 지옥을 낳고 있다.

사진 이미지

아프가니스탄

선거 이후 상황이 더한층 악화되는 아프가니스탄

유럽연합이 파견한 선거 감시단 단장은 지난주(8월 20일) 아프가니스탄 선거를 “공정” 선거였지만 “자유” 선거는 아니었다고 묘사했다.

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에게 유리하게 표를 조작하고 일부 유권자들의 투표 참가를 방해한 사례들이 보고됐다.

문제투성이 선거는 미국과 나토군이 점령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 줬다.

유럽연합 선거 감시단은 아프가니스탄 유권자들이 “상당한 방해”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여성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수백 곳의 투표소는 아예 문을 열지 않았다. 탈레반의 영향력이 강력한 남부뿐 아니라 중부와 북부에서도 그랬다. 선거 감시단은 여성 후보들이 위협을 받았고 선

거 보도에서도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야당 후보]압둘라는 투표 참가율이 10퍼센트밖에 안된 남부의 투표함에 유권자 40~45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의 표가 들어 있었고 대부분 카르자이를 지지하는 표였으며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점령군과 주류 언론은 이번 선거가 점령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탈레반과 기타 아프가니스탄 저항세력에게는 대단한 패배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것은 허풍이다. 점령군은 카르자이가 1차 투표에서 당선을 선언하면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의심이 더 커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탈레반을 권좌에서 몰아낸 후 카르자이를 대통령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카르자이는 부패와 저항세력을 제대로 소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미국

정부의 비난을 받았다. 민주당 상원의원 리처드 케이스는 지난주 카불의 주아프가니스탄 미국 대사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카르자이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이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것”이라 말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상원의원 쉬로드 브라운은 이렇게 덧붙였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다음주에 선거 결과를 공표해야 할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점령군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주 미군 합참의장 마이크 몰렌은 아프가니스탄 저항세력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탈레반에 맞서려고 1만 7천 명을 ‘증파’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몰렌은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심각하며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탈레반 저항군의 전술이 점점 정교화하고 세

련되고 있다” 하고 토로했다.

지난주 아프가니스탄 미군 총사령관은 더 많은 미군과 나토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는 올해 초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 수 3만 2천 명을 연말까지 6만 8천 명으로 늘릴 것을 명령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나토군 신임 사령관인 스탠리 맥크리스탈 장군은 추가로 4만 5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오바마는 파키스탄 탈레반 지도자 바이둘라 메수드의 죽음이 보도된 후부터 파키스탄군에게 파키스탄 탈레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오바마 정부로서는 우려스럽게도, 미국 국내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뉴스의 최근 공동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51퍼센트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전쟁이라고 답했다. 지난달에는 45퍼센트였다. 또, 응답자 대다수가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영국의 반전 정서는 더 강력하다.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9퍼센트가 영국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또, 4분의 3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덕분에 영국이 더 안전해졌다는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60퍼센트가 영국군이 최대한 빨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해야 한다고 답했다.

크리스 뎀버리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편집자

종합

세상을 흐르는

“검찰 간부의 친척이 검찰조사를 받으려 가면 담당검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

— 매형의 사기 사건에 외압을 넣은 검찰총장 김준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객관적 자료도 대부분 멸실됐다”

— ‘장자연 리스트’ 수사 종결에 대한 검찰의 뻔뻔스러운 설명

“[조중동] 3개 신문은 김대중 씨를 미화하는 기사만 보도하고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 김대중 씨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사실을 조작, 박정희를 악당으로 만들고 있다… 애도만 강요하는 투의 이런 기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반언론적 보도행태”

— 열받은 조갑제

“김민선의 버트장머리를 고치려고 이 소송을 진행한다. 말조심하라는 경고다… 미국산 쇠고기 홍보대사가 되거나, 학교 쫓아다니면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마케팅을 해 준다면 [소송 취하를] 생각해 보겠다”

— 쇠고기 수입업자 박창규

“춥습집회에 나왔던 청소년들이 향후 15~20년간 미국산 쇠고기를 안 먹으면 국민체력에 단백질 부족이 일어난다”

— 쇠고기 수입업자 박창규

“사회적 발언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1주일에 2~3권 이상의 사회과학서, 인문과학서책을 읽고, 매일 신문과 잡지의 글을 최소 3시간 이상 읽고,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보고서도 주마다 서너 편씩 읽어라”

— ‘들보잡’ 변화제가 제시하는 지적 수준의 기준

“우리 나라가 아니구나” “에이” “좋다가 말았다”

— ‘대통령이 신종플루 감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후 아쉬워하는 네티즌들

최근 성장률 반등은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가?

최근 통계에서 일본, 홍콩, 프랑스와 독일의 성장률이 회복되는 듯이 보이자 일각에서는 세계경제 위기가 끝났다는 표시라고 환호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에서 성장률이 약간 반등한 것은 주로 수입의 대폭 축소와 수출의 소폭 증가가 결합돼 돈이 나가기보다 유입된 덕분이었다. 그래서 이 나라 경제들의 국민소득이 약간 증가했다.

또 다른 요인은 제조업 부문의 붕괴가 워낙 심각해 일부 산업에서 생산품이 바닥난 것이었다. 재고가 바닥나자 일부 기업들이 그것을 다시 채우려고 생산을 늘린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은행과 기업들을 구제해 경제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려고 엄청난 액수의 돈을 펴부었다. 그 덕분에 지난 3개월 동안 공공투자가 8.1퍼센트 상승했다. 그러나 성장률 증가로 보통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동일 기간 동안에 임금이 1.7퍼센트 하락했고, 실업률도 6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유럽에서 폐차 지원 정책[현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신 차 구매를 늘린 효과는 아마 과장됐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야 어쨌든, 사람들이 6개월마다 새 차를



미국의 구직자 대열 — 세계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일본과 독일 모두에서 일부 경제 구제 정책들은 다가온 선거 대비용이었다. 일본에서 상품권 및 현금 지급, 독일에서 고용 보조금 지급도 이번 가을이면 종결된다.

프랑스 실업률은 연말에 10퍼센트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실업자 수는

연말까지 1백만 명이 늘어 총 4백50만 명이 될 것이다.

영국 경제는 지난 3개월 동안 -0.8퍼센트 성장했다. 지난주 영국은행 총재 뮐빈 킹은 영국의 경제 불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하고 경고했다. 영국 중앙은행은 은행들에 5백억 파운드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구제 조치 덕분에 일부 나라들은 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조치의 진정한 효과는 사장들의 배를 불린 것이었다.

사이먼 바스케터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기자

금호타이어는 대량해고를 중단하라

이명박과 기업주들이 쌍용차에 이어서 금호타이어를 구조조정의 시범케이스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동안 20여 차례 벌여 온 협상에서 금호타이어 사측은 임금동결, 전환배치, 무급휴직 등 6개의 개악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7백6명을 정리하고 하겠다는 태도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부분파업을 벌이자 금호타이어 사측은 8월 25일 전격적으로 ‘쟁의행위 중단 조건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쌍용차 사측처럼 강경 대응으로 사태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지난해만 해도 매출 2조 3천8백60억 원, 영업이익 3백6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4분기 영업이익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무리한 대우건설 인수 때문이었다. 2005년 금호타이어의 부채비율은 1백28퍼센트였는데, 대우건설 인수 후 지난해 5백46퍼센트까지 증가했다. 그래도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짊어 온 덕에 사내 유보금을 4조 원이나 쌓아 두고 있다.

그런데도 사측은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이 무리한 요구라며 대량 정리해고를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이라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고 있다. 노동자들은 “평균연봉 6천6백만 원을 받는 고액 연봉자들”로 공격받고 있다. 그러나 회사 경영난에 아무 책임이 없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지난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미 임금이 20~30퍼센트 삭감된 상황이고 의료비와 학자금, 복지비도 축소됐다. 생산량 10퍼센트 증가 때문에 노동강도도 높아졌다. 따라서 7.4퍼센트 임금 인상 등의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노동자들은 개악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량해고를 하겠다는 금호타이어에 맞서 7월 24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여 왔다. 그런데 이미 쌍용차에서 확인됐듯 경제 위기에 처한 지배자들에게 작은 양보라도 얻어내려면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법이다.

그 점에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지도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유로 전면 파업 계획을 부분파업으로 축소한 것은 아쉽다. 정리해고 분쇄를 위해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강도 높은 투쟁 전술을 내놓아야 했다.

노조 지도부는 회사가 ‘직장폐쇄’를 한 8월 25일에 임금 동결과 복지 축소 등을 합의하는 양보를 했다. 나아가 전환배치와 무급휴직 등에서도 양보를 한다면 사측은



7월 25일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전야제

이를 정리해고로 이어지는 다짐들로 삼을 것이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더 늦기 전에 양보가 아니라 전면 파업 등 투쟁 건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현장의 활동가들은 쌍용차에서처럼 연대 투쟁이

부족한 고립된 투쟁이 아쉬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연대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쌍용차에서 불씨를 살린 대량해고가 금호타이어로 이어지고 더 많은 곳으로 번져 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병무

민주노총 지도부 직선제 시행을 폐기해야 하는가

8월 20~21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수련회에서 중집위원 50명 중 압도 다수가 민주노총 직선제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일부는 아예 폐기를 주장했다고 한다.

인터넷 언론 <레디앙>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을 인터뷰하며 세 차례 연재한 기획기사에서 “살 길인가 죽을 길인가”, “조합원은 직선제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을 통해 직선제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정파구도 하에서 부정선거 우려와 후유증

이 클 것이다’는 주장에서는 직선제를 폐기하자는 의도까지 느껴진다.

그러나 2007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도입이 통과된 배경을 돌아보면 이런 주장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선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고 결국 통과된 시기는 2005~2007년이었다. 2005년 초에는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과 ‘노사정위 참여’ 추진에 대한 좌파 활동가들의 비판과 반발이 있었다. 그해 말에는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

위원장의 비리와 이에 따른 집행부 총사퇴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타협주의와 부패에 대한 현장조합원들의 직접적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직선제가 제기됐고, 2007년에 통과됐던 것이다.

네 차례 대의원대회 유화로 통과가 연기된 것에 대해 당시 민주노총 대변인이었던 우문숙 씨는 “내놓고 직선제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음을 보여 준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통과된 것은 ‘우려’보다 직선제 ‘요구’가 더 컸음을

보여 준다.

간선제 선거에서 정파의 독주와 답답으로 인한 민주적 통제력 상실에 대한 해법으로 직선제가 제기된 배경을 보면 ‘직선제는 정파구도를 강화할 것’이라는 반대 논리로 설득력이 없다.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간선제 아래에서도 부정선거 문제는 있어 왔다. 부정선거는 철저히 방지하고 차단할 문제이지 직선제 자체를 폐기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등으로 노동운동

이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주장대로라면 1987년 당시 사회운동은 어떻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따낼 수 있었을까?

직선제를 “정파 구도 아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이 어려운 쪽에서 … 가장 강력하게 들고 나왔다”는 주장도 직선제 의미를 폄하하는 것이다. 정파 구도가 반영된 대의원대회에서 높은 지지율로 직선제가 통과됐다는 사실을 봐야 한다.

<레디앙>의 지적처럼 “직선제가 곧 혁신은 아니다.” 민주노총

은 지난해 촛불항쟁과 올해 쌍용차 투쟁에서 보인 경제주의와 부문주의, 관료주의 등의 약점들을 극복하는 진정한 혁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직선제는 조합원이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직접 선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선거인단의 자격을 최대한 넓히고 상대적으로 조합비를 내기 힘든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민주노총 대의원에 대한 직선제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조합원

경제 위기

‘대공황 2.0’ : 거품 회복에서 1차 더블딥으로

▶ 1면에서 이어짐

케인스주의적 개입이 자산 가격 거품을 낳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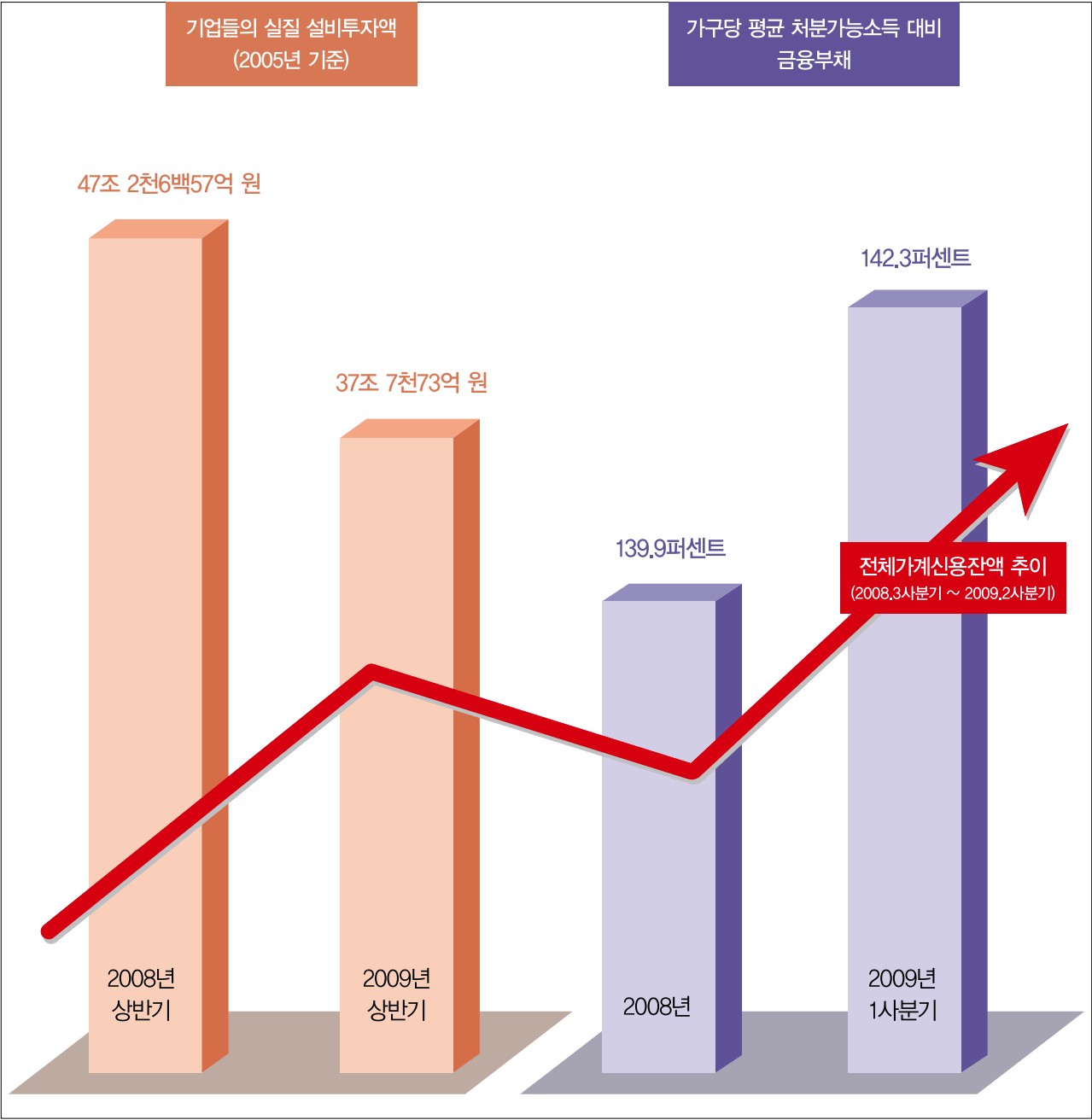
최근 주요 국가에서 주가 폭등, 부동산 가격 폭등은 진정한 의미의 ‘실적 개선’, 즉 실물 경제의 회복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대량의 과잉유동성의 투기적 유입이 만들어 낸 거품이다. 실제로 주요 국가에서 이윤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기업 투자가 감소하거나 거의 늘어나지 않고, 실업률도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계소비도 줄거나 거의 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자산 가격 거품은 조만간 붕괴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함께 세계경제는 빠르면 올 가을, 늦어도 2010년 봄 전에 더블딥에 빠질 것이다. 돌이켜 보면, 1997~98년 세계경제 위기는 ‘닷컴’ 주식 거품으로 잠시 진정됐고, 이것이 터지면서 2001년 위기가 발발했는데, 이는 다시 그린스펀 거품이라 불리는 주택가격 거품으로 진정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2007년 들어 이 주택가격 거품이 터지면서 ‘대공황 2.0’이 도래했다. ‘대공황 2.0’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개입은 주가와 주택가격 거품을 다시 키웠을 뿐인데,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경제가 회복된 증거라고 착각하거나 강변한다.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조건에서 현재와 같은 자산 가격 거품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주입, 각종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하반기 이후 각국 정부가 집행한 천문학적인 팽창적 재정금융정책의 효과는 2009년 말 이후 소진될 것이다. 2009년 말 이후 각국 정부가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나 구제금융을 실행하기는 어렵다. 각국 정부는 이미 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악화된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것들이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파장 때문에 금리 재인상과 세금 인상 등 각종 ‘출구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8월 24일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대공황 2.0’ 이후 주요 국가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연 0.5퍼센트에서 연 0.75퍼센트로 인상했다. 각국 정부가 그동안 풀었던 돈을 죄게 되면, 더블딥은 필연적이다. 반면, 각국 정부가 더블딥을 우려하여 돈을 죄지 않으면,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다.

2008년 이후 각국 정부의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의 케인스주의적 개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바로 이 때문에, 대공황 2.0을 초래한 근본 원인인 1970년대 이후 이윤율의 장기 저하, 전 세계적 과잉축적과 과잉생산, 글로벌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 등은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각국 정부의 케인스주의적 개입은 자산 가격 거품의 팽창으로 귀결

‘대공황 2.0’은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거품의 붕괴와 함께 시작돼 세계 전체로 확산됐는데, 그 1차 더블딥 국면은 한국 또는 중국에서 자산 가격 거품이 터지면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거품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전체 경기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착시 현상을 낳았을 뿐이다. 게다가 각국 정부가 엄청난 규모로 케인스주의적 개입을 했지만, 그리고 오바마의 이른바 ‘변화’ 슬로건과는 정반대로, 케인스주의자들이 이번 ‘대공황 2.0’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던 신자유주의 금융화 성장 모델, 금융 헤게모니조차 여전히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은 것”이라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 자본가들의 대표적 신조는 오늘날 “골드만 삭스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은 것”으로 대체됐다.

한국 경제 ‘회복’은 본질적으로 거품

‘대공황 2.0’은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거품의 붕괴와 함께 시작돼 세계 전체로 확산됐는데, 그 1차 더블딥 국면은 한국 또는 중국에서 자산 가격 거품이 터지면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대공황 2.0’ 이후 주요 국가들에서 각종 자산 가격은, 최근 거품이 다시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고점에 비해 상당 폭 하락한 것에 반해서, 한국과 중국의 경우 주가와 주택가격은 일시적 하락 이후 급반등했다. 예컨대 미국의 주택가격은 2006년 고점 대비 30퍼센트 넘게 계속 하락한 데 반해, 한국의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대부분 전고점을 돌파했다. ‘대공황 2.0’ 이후 각종 투기 규제를 강화했던 주요 국가들과 정반대로 종부세 무력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던 ‘강부자’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이 이에 기여한 것은 물론이다.

최근 이른바 한국 경제의 회복이 본질적으로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기업 투자가 심각하게 감소하는

데도 투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은 올 들어 7월까지 사상 최대치인 22조 6천억 원 증가한 반면, 올 상반기 기업들의 실질 설비투자액(2005년 기준)은 37조 7천7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조 2천6백57억 원에 비해 무려 9조 5천5백84억 원(20.2퍼센트) 감소했다. 우리 나라 가구당 평균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작년 1백39.9퍼센트에서 올 1/4분기 1백42.3퍼센트로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가 지난 6월까지 9개월 동안 8번이나 감소해 1991년 이래 가장 오랫동안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세계경제의 일시적 반등은 상당 부분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서 기인한 것이었는데, 이 또한 올 들어 중국 정부가 집행한 약 4조 위안(5천8백5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과 올해 상반기에만 7조 3천7백억 위안(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3배 증가한 액수인 동시에 동기 GDP의 45퍼센트에 해당된다)에 달했던 천문학적 신규 대출 증가가 만들어 낸 거품이었다. 실제로 이 대출 증가의 절반 이상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구입으로 자출됐다. 중국 정부가 이와 같은 규모의 경기부양과 신규 대출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 경우 거품 붕괴는 필연적이다. 실제로 올 들어 64퍼센트나 폭등했던 중국 주가는 얼마 전 중국 정부가 신규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3주 동안 14퍼센트나 폭락했다.

‘대공황 2.0’의 1차 더블딥은 10퍼센트에 육박하는 실업률과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 1조 달러에 달하는 부실 상업용부동산 대출, 역시 약 1조 달러로 추정되는 부실 소비자 대출(신용카드 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등)이라는

폭탄을 안고 있는 미국에서 시작될 수도 있지만, ‘대공황 2.0’ 기간에도 자산 가격 거품이 터지지 않고 도리어 증폭된 한국과 중국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이번 ‘대공황 2.0’은 그 근본적 원인, 즉 이윤율의 장기 저하, 전 세계적 과잉축적과 과잉생산,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국지적 회복을 수반하면서도, 자산 가격 거품의 주기적인 팽창과 붕괴, 실물 경제 공황의 심화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계속될 것이다.

현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정성진·크리스 하먼 외,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책갈피)를 보시오.

플라주 ㉑

플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다함께의 이론지

마르크스21 출간!

2호(2009년 여름호, 15,000원) 목차

자발성, 전략, 정치 _ 크리스 하먼
네그리와 하트로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지키기
세계의 노동계급 _ 크리스 하먼
세계화, 제국주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중국의 성장통
최장집의 민주주의론
2009년 노동조합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인터넷 민주주의 — 신화와 현실
조직자 (소셜리스트 워커)
민주집중제에 관한 메모

1호(2009년 봄호, 12,000원) 목차

금융 위기와 실물 경제
세계화와 신경제라는 신화
‘다중 지성’은 유효한 개념인가?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창당에 부쳐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사노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윤소영 교수의 알튀세르주의
촛불운동과 다함께
용산참사 항의운동 참가 경험을 돌아보며
파병반대국민행동 논쟁사

구독 신청 문의

Tel 02 2271 2395 / Fax 02 2271 2396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서울대앞)
인서점 (건국대앞)
풀무질 (성균관대앞)
이음책방 (대학로)
녹두 (동국대후문)

매주 서울의 주요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 금 저녁 7시~8시

강남역 6번 출구 100m 파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 소공원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김대중 죽음 이후

김대중의 민주대연합론은 진보진영의 계승 대상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죽은 이후, 박지원이 전한 그의 유언은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야4당과 단합하라. 모든 민주 시민사회와 연합해서 반드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문제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승리하라”였다. 즉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대연합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진보진영을 향한 진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범민주당 세력을 향한 집안 단속용 발언인 듯하다.

한편, ‘공공의 적’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려면 어떻게든 뭉쳐야 하지 않느냐는 절박감이 광범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뒤의 파장 속에 민주당이 반MB연대의 대주주가 된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진보진영 일각의 고민이 김대중의 ‘민주대연합’론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DJ의 민주대연합론은 권위주의적 우파 정부에 맞서기 위해 진보진영이 자유주의 야당과 손잡아야 한다는 고전적인 계급협력 전략의 재판일 뿐이다.

이것은 진보진영이 지난 세월 동안 부르주아 야당에 의존해서는 더는 진정한 민주주의도, 노동자들의 요구도 성취할 수 없다는 자각 속에 독립적인 조직과 운동을 건설해 온 역사를 후진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의 민주주의의 공격에 맞서 몇몇 쟁점에서 민주당과 동맹을 맺는 것은 (좌파들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운동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 용인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것이 노동계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수준까지 나아간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민주대연합은 단지 몇 가지 민주적 과제를 둘러싼 한시적 동맹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연합 정권 창출을 목표로 삼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연합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연합은 연합의 대상인 자본가 계급 정당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노동계급의 독립적 요구를 양보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사실, 민주대연합론은 오래된 레퍼토리다. 김대중과 같은 자본주의적 야당조차 탄압받던 독재시절에 이것은 꽤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조차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을 때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상당수는 독재의 영향에서 벗어난 1997년 대선에서도 민주대연합론의 포로였고 2002년 대선에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김대중과 노무현 집권 10년은



2001년 효성 경찰력 투입 규탄 및 김대중 정권 퇴진을 위한 영남노동자대회
DJ·노무현 10년은 민주대연합론이 왜 진보의 선택이어서는 안 되는지 입증해 주는 시기였다.

사진 레프트21

민주대연합론에 대한 무장해제를 경계한 좌파의 주장이 왜 옳았는지를 철저히 보여 준 시기였고, 진보진영의 독립적 운동과 조직, 선거대안이 필요함이 입증된 시간이었다.

김대중이 최루탄과 백골단을 없애고 계급 갈등을 체제 내로 일부 흡수하려는 시도를 병행했지만, 1987년 항쟁 이래로 성장해 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과 전교조 합법화를 김대중의 공로로 꼽지만,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쌓아온 투쟁이 조성한 현실적 힘 관계에 대한 타협일 뿐이었다. 더구나 김대중은 노동(3권이 아니라) 1.5권만 허용하며 전교조에 족쇄를 채우려 했다.

더 정확한 그림을 보여 주는 것은 김대중 정부 내내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속출했고, 노동자 투쟁에 대한 강경진압은 ‘민주정부’라는 말을 무색케 했다는 것이다.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조 출범식에는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고용보장을 요구한 대우차 노동자들과 파업 지지자들은 지하철까지 들이닥친 군화발에 짓밟혔다. 민주노총이 김대중 정권 말기에 정권 퇴진을 요구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본격 도입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이 급증했고, 노동유연화가 증가했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봉사하는 부르주아 야당의 계급적 본질을 보여 준 것이다.

진보진영조차 입을 모아 칭찬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악마화한 이전 정부보다는 나은 것이었지만, 진보진영이 무비판적으로 지지하기에는 미흡한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 아래 두 차례나 벌어진 서해교전은 햇볕정책이 군사적 충돌을 배제하지는 않음을 보여줬다. 김대중은 한반도 긴장 격화의 핵심적 원인 제공자인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도전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6·15공동선언은 남북 민중의 자유로운 교류, 분단을 필미로 한 남북한 정권의 억압적 법률 폐지와 같은 노동자·민중에게 절실

한 실질적 변화는 포함하지 않았다.

쓰러린 경험

그런데도 이런 미흡한 대북정책에 매달리느라 진보진영의 투쟁은 종종 발목 잡혔다. 노동자 투쟁은 6·15선언 경축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외면당했고, 정부가 주도하는 남북통일행사 참가를 위해 자제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결국 집권 초기부터 지지를 잃고 위기를 맞은 김대중 정부는 이런 운동의 약점을 이용해 활동가들을 대거 구속하고 노동자 투쟁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풀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경험은 부르주아 야당과는 독립적인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을 일깨우는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이것은 2000년에 민주노총이 주도해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김대중을 경험하고도 2002년 대선에서 또다시 진보진영 내에서 이회창에 맞서 노무현을 지지해야 한다는 민주대연합론의 새로운 버전이 유행했다. 다만, 은밀히 지지했다는 점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러나 노무현 5년의 경험도 다들 바 없었다. 파병, 비정규직 확대, 양극화 심화, 한미 FTA 체결, 국가보안법 탄압 등 개혁 열망에 대한 배신이라는 쓰러린 경험만 남겼다.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거치면서 민주노동당과 거기서 분리해 나온 진보신당은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민주

당과도 독립적 대안을 주장하며 주요 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내세웠고 국회의원까지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 이명박에 맞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맺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진보진영 내 활동가들도 노무현 5년의 배신이 이명박을 낳았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한다. 노회찬 의원 말대로 “1948년 이래로 가장 나은 정부가 1987년 이래 가장 나쁜 정부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된 역설”이 존재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은 후 반MB연대에서 민주당의 지분이 커졌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확고하지는 않다. 그래서 진보진영 내 어떤 세력도 민주당과의 포괄적 연합을 선포하게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과의 연결고리 구실을 했던 민생민주국민회의의 주요 활동가조차 반MB진영이 반대하는 정책의 뿌리가 대부분 이전 정부에 있었고, 이 같은 ‘원죄’가 있는 민주당과의 연합은 더디고 뼈저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쌍용차 파업 지지 문제와 같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 동맹의 공식적 의제로 오르지도 못했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선택은 이미 파산한 김대중의 민주대연합론을 계승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경제 위기와 정부의 막가파식 탄압 때문에 대중운동의 분출이 쉽지 않은 조건에서 민주당을 넘어선 반이명박 진보 대안을 건설하는 과정이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피죄죄한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민주당과의 민주대연합으로 후퇴할 수는 없다.

노동자들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른 민주당과의 민주대연합은 노동계급의 요구 삭감과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일관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인 노동계급의 투쟁을 자제하라는 거대한 압력을 형성할 것이다. 이것은 반이명박 연합의 수혜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진보진영의 반MB 대안은 자본가 정당과는 독립적인 정당과 운동을 건설하려고 노력해 온 진보진영의 역사를 거슬러 다시금 과거로 회귀하는 것 이상이 돼야 할 것이다.

최미진 기자 | lionlady@left21.com

※ 김대중 죽음에 대한 본지의 입장은 (레프트21) 웹사이트에 실린 온라인 기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부처’를 읽어보시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김대중 복지 정책 평가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은 노동자에게 비용 떠넘기기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진보 진영에서도 그의 공과를 평가하는 여러 논평을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곳조차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문제였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래서 그동안 의료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높은 파도 앞에서 공공성 중심의 국가의료제도를 끝까지 지켜내고 발전시켰다”(〈레디앙〉 8월 20일치)고 극찬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주장대로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 건강보험 통합 등 ‘개혁적 제도’들이 실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 수준을 단순히 개혁적 제도의 도입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느냐다. 1998년 당시 건강보험 통합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 노동자들의 보험료가 33~42퍼센트나 인상됐다. 김대중 정부는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달래려고 수가를 대폭 인상했고 그 결과 다시 의료보험료가 대폭 인상됐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은 한 차례 재정 고갈 위기를 겪었고 다시 그 부담을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지웠다. 보험 재정 고갈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인 양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다. 반면 정부 재정 지원은 거의 늘지 않았다.

기업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신 기업주들은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해 비용 부담을 대폭 줄였다.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에게는 보험 적용 범위와 수준이 확대됐지만 김대중 정부가 양산한 비정규직은 아예 복지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당시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총 등이 김대중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을 그토록 반대했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은 그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선이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김대중 정부 시절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난 것을 성과로 꼽는데, 그것은 김대중 정부가 의도한 것이라기보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결과다. 김대중 정부보다 앞서 신자유주의적 복지 삭감을 추진한 OECD 여러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되도록 많은 비용을 노동자들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애초에 의도한 바 — 기업주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 를 관찰시키려고 애썼다. 시

장 논리에 따라 복지 부문에서 비용을 인상하거나 민간으로 이전하는 등의 정책들이 그것이다. 당연히 노동자들은 이런 정책에도 맞서 싸웠다.

그러므로 김대중 정부가 복지 확대를 추진했다고 보는 것은 부정확한 평가다. 이런 평가는 김대중 정부 때 신자유주의적 복지 정책에 반대하며 복지 확대를 요구해 온 운동의 구실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상 의료 등 진정한 복지 확대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달리 기업주와 부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

장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신종플루 대유행에 허둥지둥하는 이명박 정부

박건희 기자 | pkh@letf21.com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6월 초에 신종플루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고, 7월에는 감염자 수가 너무 많아 집계를 포기했다. 겨울철인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물론이고 여름인 북반구 나라에서도 무서운 기세로 전염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무더운 여름철에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 크다. 또 신종플루 환자의 70퍼센트가 20대 이하인데 개학 이후에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해 확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WHO 서태평양지역본부 박기동 박사의 말처럼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

WHO는 앞으로 2년 동안 최대 20억 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될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 정부도 대유행이 시작되면 몇 달 안에 8백만 명이 감염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에서는 1주일 새에 감염된 사람이 11만 명에 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메카 등 이슬람 성지를 순례하려면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코스타리카의 현직 대통령이 신종플루에 감염되기도 했다. 스페인 보건부는 키스를 자제하라는 지침까지 발표했고, 한국 외교통상부는 신종플루 발생으로 해외 여행경보를 지정한 국가가 1백48곳에 이를 정도로 많아지자 ‘경보’가 무의미하다며 지정을 해제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신종플루로 두 명이 사망하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요란스럽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다.

우선, 체계적인 계획 없이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거점 병원과 약국을 지정해 의료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지정한 거점 약국에는 치료약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거점 병원에는 격리 진료 시설과 격리 병동이 준비 안 된 경우가 태반이었다. 서울삼성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격리 시설이 없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거점 병원을 지정하면서 정부는 보건소에서 일반인을 진료하는 것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거점 병원에서도 제대로 된 신종플루 대응 방안이 없어 우왕좌왕했다. 보건소에 가면 병원에 가라 하고 병원에 가면 보건소에 가라는 식이다. 애꿎은 환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며 고생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삽질하는 동안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 지침도 문제다. 정부는 치료약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이나 6세 이하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만 타미플루와 리렌자 등 치료약을 처방하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신종플루 감염자 중 85퍼센트가 ‘고위험군’이 아닌 30대 이하고, 타미플루는 초기 48시간 내에 투약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 지침으로는 효과적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신종플루 사망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도 사망자의 60퍼센트는 50세 미만이었다.

실제 국내 첫 번째 신종플루 사망자는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았고 감염 초기에 보건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체온이 신종플루 치료 기준에 0.1℃ 못 미친다며 항균비누만 쥐 줘서 돌려보냈다. 그리고 1주일 뒤에 그는



서울시내 보건소의 허접한 격리시설 이러니 신종플루가 퍼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진 이미지

사망했다. 정부의 대책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여처구니없는 죽음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백신 확보도 문제다. 지난 5월 초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백신 확보 예산을 짜는 데만 두 달이 걸렸다. 그러나 해외의 백신 제조업체들은 한국 정부의 백신 구매가격이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혈값’이라며 백신을 판매하려 하지 않았다.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두 달을 또 허송세월했다.

정부는 1천3백만 명분의 백신을 구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에서 독ship자가 생산할 예정인 6백만 명분을 제외하면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다른 나라에서 백신을 선점했고 다국적 제약회사들도 생산물량이 부족해 독ship자에게 백신을 사겠

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 백신도 빨라야 11월 초에 나올 수 있는데 의료인·방역요원·군인들에게 우선 접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올해 안에 예방접종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백신은 3주 간격으로 두 번을 접종해야 해서, 빨라야 12월이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치료약 확보도 마찬가지다. 이미 조류독감의 인체 발병 때문에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한 지가 5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치료약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인구의 11퍼센트인 5백30만 명분의 치료약을 보유하고 있고 5백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해 WHO가 권고하

는 전체 인구 20퍼센트의 치료약을 구비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5백30만 명분도 올해 안에 들어오기로 ‘계약’된 것이지 실제 수중에 확보하고 있는 것은 2백50만 명분이 고작이다.

사실 신종플루는 빠르게 전염되지만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 자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우 쉽게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고유한 특징 때문에 전염도 빠르고 치사율도 매우 높은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을 경고하는 것이다.

그중 치사율이 60퍼센트에 달하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H5N1과의 결합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다. 최근 칠레에서 칠면조가 돼지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소식은 그 가능성에 한 발 다가섰음을

보여 준다. 조류독감으로 많이 사망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신종플루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것도 불길하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인류는 상상할 수 없는 대재앙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신종플루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둘 중 하나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섬뜩하다.

그러나 대안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복제약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강제실시가 그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회는 “아직은 약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실시를 하면 국제적 신의에 맞지 않다”는 정신 나간 소리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당장 강제실시를 통해 치료약을 생산해야 한다.

왜 21세기에도 전염병 대재앙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최첨단 기술 발달로 화산전화도 하는 21세기에, 인류는 도대체 왜 여전히 전염병으로 인한 대재앙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신종플루의 유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운영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체제다. 자동차 회사든, 컴퓨터 회사든 경쟁을 통해 이윤을 얻고,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도태되고 퇴출된다.

따라서 더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유일한 목표가 된다. 살아있는 생물을 기르는 축산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축산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위생적이고 비좁은 우리에 최대한의 동물을 몰아넣고 사육한다. 이런 환경 때문에 동물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에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동물이 질병에 걸리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시장에 내다 팔 정도로 살이 찌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시장에 출하하려고 동물에게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매일 먹인다. 미국에서 사람의 질병 치료를

위에 사용하는 항생제의 양은 연간 3백만 파운드인 반면, 가축에 투여하는 양은 8곱절이 넘는 2천5백만 파운드에 달한다. 항생제 남용은 자연스레 항생제 내성을 낳고 항생제 내성 균의 증가는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된다. 이런 사육환경에서 결국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 신종플루 대유행을 낳은 것이다.

이윤지상주의라는 걸림돌

자본주의의 이윤 논리는 이런 전염병을 해결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류는 이미 신종플루 발생 전부터 독감 치료약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약회사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특허권 때문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었다.

현재도 특허권을 갖고 있는 로슈의 공장에서만 신종플루 치료약인 타미플루를 필요에 턱없이 부족한 양만 생산하고 있고 그나마 강대국을 중심으로 나눠져 제3세계의 가난한 민중에게는 언급생심일 뿐이다.

자본주의의 쌍생아인 불평등과 빈곤도

심각한 문제다. 형편없는 식사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할 당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인도에서 전 세계 사망자의 60퍼센트 가까이 발생했다. 몸바이의 하층 카스트 주민들은 부유한 인도인과 유럽인들보다 8곱절이나 많이 죽었다.

1백여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멕시코는 의료민영화로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된 상황이어서 초기에 신종플루 사망자가 유독 많았다. 현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OECD 국가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지구를 몇 번씩이나 날려버릴 핵무기는 가지고 있어도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기초적인 의료체계에는 관심이 없다.

이명박도 부자들에게 수조 원을 감세해 주기 위해 보건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 때문에 ‘신종 전염병 대책’ 예산은 총 17퍼센트 삭감됐고, 이 중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치료제 지원’ 예산은 46퍼센트인 20억 9천만 원이 삭감됐다.

해의 발생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1차적인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립검역소 예산은 4억 원 삭감됐고, 지역 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시 지역 보건지소 확충 예산은 48퍼센트인 45억 원이 삭감됐다. 반면 의료민영화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예산은 63억 원이 새로 배정됐다. 이러니 신종플루가 퍼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명박이 4대강 사업 같은 삽질에 정신 팔려 있는 동안 대재앙은 점점 우리 곁으로 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윤이 제일 중요한 이 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 따라서 재앙을 막으려면 체제의 핵심인 이윤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한다.

인류는 이미 1918년 스페인 독감을 통해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는 대재앙을 경험했다. 당시에 관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시체를 땅에 묻을 사람조차 부족했다. 이런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 강제실시를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에서 이윤 논리가 제거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위해 싸울 필요가 있다.

쌍용차 파업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쌍용차 파업을 평가하며 <한겨레>, <경향신문>, ‘창비주간논평’ 등 자유주의 개혁 진영에서 ‘강성 파업’을 비판한데 이어서 파업에 관여한 일부 활동가들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책적 대안” 제시가 부족한 채 공장에 국한 된 점거 파업 같은 ‘과거 방식의 되풀이’가 문제(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였고, “양보를 통해 시민사회와 여론의 지지를 얻었어야 했다”(조건준 금속노조 정책국장)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주장은 쌍용차 투쟁 결과에 대한 패배적 평가와 연결돼 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과, 쌍용차 노동자들이 처했던 불리한 환경을 고려할 때 이번 투쟁 결과를 단지 패배로 평가할 일은 아니다.

1998년 현대차 파업 결과에 비하면 해고자 비율이 더 많지만, 당시 현대차의 경영 상태는 쌍용차보

다 훨씬 괜찮았다. 이에 비해 사실상 부도 상태로 내몰려 시종일관 청산 협박에 시달렸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훨씬 어려운 조건에서 싸워야 했다. 똑같이 부도와 해외매각을 겪었던 2001년 대우차 파업과 쌍용차 투쟁을 견적 보면 월등히 좋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대우차 노동자들은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1천7백50명 해고를 당하고 말았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은 77일간의 점거파업 끝에 해고자의 거의 절

반을 지켜냈다(물론 지금 이 결과는 정부와 사측의 야비한 보복과 뒤통수치기로 불확실해지고 있다).

다른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에 비해 투쟁 경험이 적었던 쌍용차 노동자들이 영웅적인 투지를 과시한 것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얼마든지 투쟁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쌍용차 파업은 이런 잠재력과 함께, 앞으로 정부와 기업주들의 구조조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선제적 양보가 필요했는가

금속노조 조건준 정책국장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을 움직일 ‘유인 효과’가 필요”했다며, 이를 위해 양보교섭안을 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 국장이 주도해서 쌍용차지부가 6월 초에 발표한 양보교섭안은 파업 노동자들의 반발로 나중에 폐기됐다.

자유주의 개혁 언론들이 이 양보안에 호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와 사측은 노조의 양보 의사에 더 기세를 올려 정리해고를 관철하려고 했다.

조 국장은 “회사의 수용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여론의 힘을 얻음으로써 연대와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론의 지지와 연대 확산은 단호한 점거 파업 속에 노조의 양보 교섭안이 폐기되고, 이 투쟁이 역동적인 정치 정세와 결합하기 시작한 6월 중순 전후부터 시작됐다.

더욱이, 정책 대안에 대한 여론 지지도만으로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지도 않는다. 쌍용차 파업에서도 정부와 사측보다는 노조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

았지만 중요한 것은 요구를 관철할 힘, 즉 실질적인 연대 파업과 투쟁의 확산 여부였다.

한편 “고용안정 투쟁에서 양보하고 대신 안전망 확충을 요구했어야 했다”(‘창비주간논평’)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당장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서 물러선 다음에 기약도 없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기다리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 서라도 조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과 파업이 필요하다. 그런 투쟁력으로 정리해고 저지 투쟁에서 승리하는 게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 투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과도한 파업 전술’을 문제 삼으며 선제적 양보가 필요했다는 평가와 주장은 2001년 대우차 파업 평가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양보를 통한 실의 쟁취” 추구는 실익도 가져다주지 못한 채 운동의 혼란만 초래했다. 쌍용차 파업에서도 사측의 정리해고 1백 퍼센트 관철 입장을 무너뜨린 것은 점거 파업의 힘이었지, 번번이 무시당한 ‘선제적 양보’가 아니었다.

정책 대안 제시와 점거 파업은 대립하는가

평택공장에 한정된 점거 파업 때문에 정치 투쟁이 곤란했다는 평가도 있다. “투쟁의 거점을 평택으로 한정하고 옥쇄파업을 선택하면서 대정부 사회 투쟁의 동력은 급격하게 떨어졌다”(이종탁)며 “문제는 구조조정 정책인데 단순히 고용 문제로 환원돼 아쉽다”(금속노조 공계진 정책실장)는 것이다.

대안적 요구를 제시하며 정치 투쟁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옳다. 그러나 그것을 점거 파업과 분리시켜 대립시키는 것은 틀렸다.

이 부소장은 “한 사업장의 투쟁과 그것에 대한 연대를 통해 자본과 정권에 맞서는 총 노동의 대자본 전선을 형성하려는 발상은 매우 순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단위 작업장 투

쟁일지라도 정부 정책 전반에 도전하는 대리전 양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1998년 현대차 파업은 ‘IMF’식 구조조정’에 대한 본격적 반발로 간주됐다. 이 투쟁을 계기로 김대중 정부 구조조정 정책에 일정한 수정이 가해지기도 했다. 2002년 발전 파업도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를 냈다. 2007년 이랜드 노동자들의 매장 점거 파업도 비정규직 악법의 문제점을 정치 쟁점화시켰다.

쌍용차 파업도 이명박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시험대로 간주됐다. 따라서 점거 파업 승리를 위한 연대 투쟁 확산 노력과 함께 공기업화 같은 진정된 대안을 제시하며 대정부 정치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했다.

공기업화 요구와 정치적 투쟁이 중요했다

그 점에서 “단위 작업장 투쟁을 넘어서 사회적 의제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 부소장의 주장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점거 투쟁은 강력했지만 ‘쌍용차 회생’ 문제에 대한 혼란 때문에 투쟁이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부도기업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를 분명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 부소장 등이 제기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한시적)공기업화’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요구였다.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정부와 사측이 양보는커녕 파산 협박을 강화하며 강경하게 나오자, 시간이 갈수록 ‘현실론’으로 기울면서, 양보부터 하고 나서 자금을 지원받자는 생각이 강해졌다. 이 때문에 반복적으로 노조가 양보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구조조정 후 자금을 지원하겠다면 정부의 논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공적자금 투입 요구는 추가적인 매각이나 구조조정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문제점 외에도 노동자 양보론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따라서 대안적 요구를 사회적 의제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더 있어야 했다는 이 부소장의 지적은 반만 옳다. 진정된 문제는 어떤 대안을 제기하고 어떻게 투쟁할 할 것인가였다.

관련해서 일부 신디칼리즘 경향 활동가들이 공기업화 요구가 자본주의 정부에 대한 환상을 조장한다며 그저 생존권 투쟁이면 족하다는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였다. 과잉생산 속에 쌍용차를 회생시켜도 팔 시장이 없다며 청산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과 정치적 대안 제시없이 무조건 투쟁하자는 말은 정치적 무능력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윤 논리와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쌍용차를 공기업화해서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했다. 이는 정부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기는커녕 대정부 정치투쟁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다. 공기업화 요구는 쌍용차라는 개별 작업장을 넘어 경제 위기 속에 고용불안을 느끼는 전체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며 점거 파업과 연대 파업을 연결시키는 초점 구실을 할 수도 있었다.



정부와 사측이 정리해고 계획을 온전히 관철하지 못한 것은 점거파업의 힘이었지 ‘선제적 양보’가 아니었다

사진 임수현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정일부 부소장은 쌍용차 파업 평가 논의가 ‘산별노조 무용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산별노조가 충분히 안착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경험은 산별노조라는 조직형식이 곧바로 광범한 연대 투쟁과 정치 투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줬다. 쌍용차 투쟁의 승리를 위해 필요했던 제대로 된 연대 투쟁과 정치적 투쟁 건설을 위해서는 조직형식상의 해법을 넘어서 노동조합 운동 자체가 정치화해야 한다.

노동조합 투쟁은 전투성만을 추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야 한다. 노동운동은 정치를 결합함으로써 훨씬 강해질 수 있다. 쌍용차 파업에서도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이라는 행동강령(국제 노동운동의 경험에서 확립된) 같은 정치적 대안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했다.

실질적인 연대 파업 건설을 위해서도 업종별·부문별 분리, 노조 상층 지도자들의 보수적 압력에 도전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변혁의 관점에서 노조운동의 강점을 이해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정치 전망과 그에 따른 운동이 필요하다.

노동조합 운동은 임금과 일자리를 위한 투쟁뿐만 아니라 피억압 대중이 일상으로 겪는 소외와 차별 문제를 비롯해 민주적 권리 확대를 위한 투쟁 같은 작업장을 넘어서는 투쟁 등에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런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정치적 시야가 넓어

지고 사회적 힘이 증대될 수 있다. 한국 노동운동의 경험은 정치 투쟁이 약진하면서 산업 투쟁이 자극받을 수 있음을 되풀이해서 보여 줬다.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도 6월에 절정에 이른 민주항쟁에 힘을 얻은 것이었다.

그런데 일부 좌파 활동가들은 종종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이끈다는 이유로 정치 투쟁과 민주적 권리 옹호 투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예컨대 쌍용차 투쟁 때도 상당수 좌파 활동가들이 “쟁점이 뭘”하고, “공장 사수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쌍용차 노조의 6.10 범국민대회 참가에 부정적이었다. 민주노총과 주요 연맹 지도자들도 당시 정치적 시위들에 조합원들을 동원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쌍용차 고위 관리자도 “구조조정을 큰 문제없이 관철할 것으로 봤지만 노무현 사망 정국 이후 불투명해 졌다”고 한 것처럼 쌍용차 투쟁의 가장 큰 우군은 사실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파괴에 분노하던 반이명박 정서와 운동이었다.

따라서 노동조합 운동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을 시도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위한 산업 현장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는 경제와 정치의 분리가 해로움을 이해하고 둘의 결합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주의 정치조직이 이런 노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처음부터 넓은 지지를 받거나 성공적이기는 쉽지 않았지만, 다음 기회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운동의 정치화가 필수 불가결하다.

정중남 다함께 노동조합합장

후퇴를 거듭하는 의료 개혁과 오바마의 위기

‘변화’에 대한 열망을 안고 대통령에 당선한 오바마의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취임 초 70퍼센트에 이르던 지지율은 어느새 50퍼센트대까지 내려갔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50퍼센트를 밑돌기도 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8개월이 갓 넘는 것을 생각하면 ऐसा롭지 않은 속도다.

그 배경에는 오바마가 약속했던 개혁의 후퇴가 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오바마 당선 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 파산한 기업 CEO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제 정책, 불충분한 서민 지원과 급증하는 실업 등에 실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지부진한 의료 개혁은 사람들이 오바마에게 등을 돌리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은 국민의 15퍼센트(약 4천 6백만 명)가 의료보험 없이 살아간다. 개인 파산 원인 1위가 의료비 부담일 정도로 의료비가 비싼 나라에서 말이다. 지난해 개봉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는 이런 미국의 현실을 생생히 보여 줬다.

그래서 오바마가 미국 의료 체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 대다수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6월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5퍼센트가 오바마의 의료 개혁을 지지했다. 민주당이 백악관뿐 아니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개혁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오바마의 ‘의료 개혁안’은 애초에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었다. 즉,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이 민간보험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보험을 일부만 도입해 민간보험과 경쟁하게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민간 보험회사들이 의료 시장에서 얻는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의료 개혁’을 추진하려 한 오바마는 거대 제약회사·보험회사 대표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설득에 나섰다. 또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그는 의료 개혁을 극렬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과도 타협점을 찾으려 애썼다.

이 과정에서 오바마의 ‘의료 개혁안’은 그나마 있던 개혁성마저 점차 잃어갔다. 최근 하원에서 잠정 합의된 ‘의



오바마 정부에 의료 개혁을 촉구하는 시위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라”

최근 오바마는 “공공보험을 도입할지 말지가 의료 개혁의 전부가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며 공공보험 도입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료 개혁안’을 보면, 맨 처음 제출된 안보다 의료보험 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중소기업이 늘었고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의료보험 가입 보조금은 줄었다. 심지어 최근 오바마는 “공공보험을 도입할지 말지가 의료 개혁의 전부가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며 공공보험 도입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의료 개혁을 저지하는 데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우파들의 악선동과 공격에 오바마가 무기력하게 타협하자 사람들은 개혁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접고 있다. 7월 말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퍼센트가 오바마의 의료 개혁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조세 부담을 늘리며 의료 서비스 선택폭을 제한시킬까 봐 걱정된다고 답했다.

오바마의 이런 후퇴는 자유주의적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그가 갖는 한계에서 비롯한 것이다. 오바마가 속한 민주당은 자본가 계급에 깊숙

이 뿌리내린 정당으로 각종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정치 자금을 받는다. 제약회사·보험회사 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들이 2000년 이후 상·하원 의원들에게 뿌린 돈이 약 3억 7천만 달러이고 그중 절반이 보건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 위원회에 집중됐다. 특히 빌 클린턴이 의료

개혁을 시도했던 1992년과 의료 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최근에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후원이 몰렸다.

오바마가 시장에 내몰려진 의료의 공공의 영역으로 되찾아 올 것이라던 기대는 점점 쓰디쓴 환멸과 배신감으로 변하고 있다.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날 미국 복지제도의 대부분은 193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확립된 것들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과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로 표현된 이 정책들이 시행된 배경에는 사회 변화에 대한 광범한 열망과 강력한 대중 행동이 있었다.

1930년대 대공황을 배경으로 노동자 투쟁이 활발해지며 오늘날 미국 복지제도의 기본틀인 기업형 복지가 구축됐고 노조법 등 개혁법이 통과됐다.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과 반전운동 등 사회운동이 활발해지며 오늘날 미국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메디케어(노인에게 제공되는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이드(빈곤층에게 제공되는 의료보장제도)가 확립됐다.

이런 개혁들은 단순히 위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미국 사회 변화의 열쇠는 오바마가 아니라 그를 통해 변화를 얻고 싶어 했던 평범한 미국인들의 자주적 행동에 달려 있다.

조명훈 기자 | jomh@left21.com

여성 육상 선수 세메냐 논쟁

성은 단지 XX 염색체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여성을 정의하는가? 겉모습? 옷? 지난 몇 주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 육상 선수 캐스터 세메냐가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성]이 자기 분야에서 너무 잘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애기인즉슨, 어떤 사람이 단발, 탄탄한 체형과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으면 여성일 리 없다는 것이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세메냐가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결승을 치르기 직전에 발표한 성명에서, 세메냐가 성 판별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세메냐는 경주에서 승리했는데 이것은 별로 여성스러운 일이 아니고, 우승 후 평평 울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 ‘진짜’ 여성이라면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었을 것이다.

IAAF는 정말 비열했다. 원래 이 조직은 설사 육상 선수가 속임수 — 예컨대, 성적 향상 약물 복용 — 를 저지른 혐의

가 발견되도 사실을 완전히 확인한 뒤에야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테스트 결과 발표가 아직 몇 주나 남았는데도, 결승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했고, 이제 겨우 18살인 세메냐는 전 세계 일간지들의 특종 거리가 됐다.

절대적 성차가 존재할까?

IAAF가 세메냐에 관한 논란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며, 비슷한 논란이 다른 육상 선수들에게 주었던 충격을 생각해 보면 더 그렇다. 예컨대, 중거리 선수 산디 사운다라잔은 성 판별 테스트에서 “실패”해 2006년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은메달을 박탈당한 후 자살을 시도했다.

세메냐에 관한 논란의 핵심을 명확히 하자. 황색 언론들의 왜곡과는 달리, 세메냐는 남성이 여성으로 가장했다는 혐

의를 받고 있지 않다. ‘한때’ 남성이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규정을 보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상 선수는 자신이 선택한 성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다. 또, 2년간 호르몬 치료를 받은 선수는 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있다.

성 판별 조사에는 보통 부인과 의사, 내분비 학자, 심리학자와 내과 전문가가 참가한다. 그러나 이 조사는 평판이 별로 좋지 않다. 2000년에 <미국 의학 협회 저널>은 이 조사를 “어렵고, 값비싼 뿐 아니라, 결과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하고 평했다.

DNA 테스트로 어떤 여성이 보통의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테스트로 세메냐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인가? 여성이 XY 염색체를 가지고, 남성이 XX 염색체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성기를 제외하면, 성차라는 것은 주로

만약 우리가 절대적 성차라는 관념을 받아들인다면,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것을 원하거나 동일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게 된다.

단순한 통계의 문제다. 육체 모양, 체중, 모발 길이에서 ‘보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주위를 둘러보라. 절대적 법칙은 아니다.

나는 생물학 전공자도 아니고,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룰 지면도 없다. 그러나 성간의 절대적 차이에 관한 사회적 통념의 증거를 우리 유전자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우리는 똑같은 기원에서 출발하지 않았는가?

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사

회적, 역사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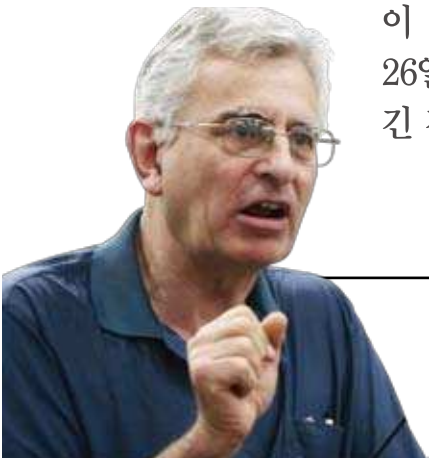
진실은 여성이 너무 잘하거나 힘이 넘치면 ‘비여성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다. 나는 평범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마가렛 대처가 여성이었을 리 없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절망감을 느낀다. 대처는 남성이 아니었다. 대처는 보수당원이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이 진정한 문제였다.

만약 우리가 절대적 성차라는 관념을 받아들인다면,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것을 원하거나 동일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게 된다. 물론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 세메냐라는 젊은 여성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도 공통점 중 하나일 것이다.

켈리 힐디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기자

오늘날의 제국주의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크리스 하먼이 7월 26일 다함께가 주최한 진보포럼 ‘맑시즘 2009’에서 연설한 것을 옮긴 것이다. 다음 호에는 ‘21세기 노동자 계급’이 실릴 예정이다.

크리스 하먼

영국의 좌파 이론지 《인타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국내에는 최근에 나온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공저를 비롯해 《민중의 세계사》, 《오늘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 《오늘날의 노동자계급》,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세계를 뒤흔든 1968》 등 10여 권의 책이 번역·출판됐다.

오늘날 제국주의를 논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20세기는 수많은 전쟁과 전쟁 위협으로 점철된 세기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이론은 바로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한 세기 전에 개발된 이론입니다. 중요한 이론가 두 명, 즉 레닌과 부하린이 각각 1916년과 1917년에 제1차세계대전을 설명하기 위해 제국주의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요지는 자본주의가 위낙 발달한 탓에 이제 경쟁이 더는 개별 기업들 간의 경제적 경쟁에 국한되지 않고 적어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국가간 경쟁도 수반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진국의 기업들은 자기 국가의 힘에 기대서 세계 나머지 지역을 수탈하고자 했고, 자기 국가의 힘에 기대서 다른 나라의 경쟁 기업들이 자신의 전리품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이,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가 각각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자기 나라 기업들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제국을 구축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들 제국은 서로 합의해 각자의 지분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 제국들이 서로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게 되면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번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과 러시아도 각자의 제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누가 한반도를 차지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열강들의 이 같은 각축 때문에 한반도는 20세기 최초의 전쟁터(러일전쟁)로, 그리고 1950년기에는 냉전 시대 최초의 전쟁터(한국전쟁)로 선정되는 끔찍한 영예를 누렸던 것입니다.

미국의 마피아 식 지배 전략

20세기 전반기의 주요 전쟁들은 영국과 프랑스를 한 축으로 하고 독일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세계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이들 전쟁에서 정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가들이 나머지 세

계를 수탈할 능력이 그 하나였고, 제국주의 열강 중 누가 나머지 세계를 더 많이 수탈할 것이냐를 둘러싼 충돌이 다른 하나였습니다.

1차 대전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한 편이 돼서 독일과 싸웠고, 결국 전자가 승리했습니다. 한동안 평화가 이어지다가 끝이어서 2차 대전이 발발했는데, 이 때도 1차 대전 때와 동일한 진영이 서로 맞붙었고 미국과 일본이 각각의 진영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의 결과로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 패권을 잃었고 오히려 미국과 소련이 세계 패권을 나눠 갖게 됐습니다. 2차 대전 직후의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였습니다. 전 세계 생산의 절반 가량이 미국 국경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맞먹을 수 있는 나라는 소련뿐이었습니다. 소련은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작았지만 유라시아 대륙 북부를 거의 독차지 하다시피 했습니다. 대서양 내륙 2백마일 지점부터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지역 전체가 소련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미국이 첨단 무기 면에서는 앞서 있었지만 방대한 영토를 장악하고 있는 소련이 지상전에서는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소 양국이 35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미국은 소련과 중국 이외의 모든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지역은 아니고 몇몇 예외가 있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양대 진영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은 세계의 3분의 2를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미국은 과거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가 행했던 것과 같은 직접적인 식민통치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마피아식 지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즉, 미국은 세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자기 영역 내의 지배계급들에게 “너희들이 ‘보호세’만 내면 우리가 너희들을 후원해 주마”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보호세는 현금이 아니라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그들 나라에서 영업할 수

20세기 자본주의가 위낙 발달한 탓에 이제 경쟁이 더는 개별 기업들 간의 경제적 경쟁에 국한되지 않고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국가간 경쟁도 수반하기에 이르렀다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힘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현지 지배자들에게 양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한 지배자들은 1960~70년대에 독자적인 경제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 이는 소련, 중국, 북한과의 경쟁에서 남한이 미국에 필요한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보호 아래 미국한테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지배계급이 등장할 수 있었던 국가가 당시에 15~20개 나라 정도 있었습니다. 다 폐쇄 영화화 보면 항상 젊고 야심 많은 중간보스거나 이른 보스를 몰아내고 자기가 ‘대부’가 되려고 하는데, 미국도 번번이 그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젊고 야심만만한 보스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대부’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미국이 오늘날 직면한 문제는, 전 세계 생산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차 대전 직후에는 50퍼센트 가량이었으나 인도 같은 더 작은 도전자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은 더는 40~50년 전처럼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미국의 경제력 비중이 22퍼센트라면 군사력 비중은 무려 50퍼센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른 나라 지배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상기시켜 줘야만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와 국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시장주의자들, 신자유주의 이론가들 중에는 ‘자본주의에 더는 국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파 진영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인즉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고 세계 각처에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국가가 왜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포드 자동차가 기아 자동차를 차회사로 두고 있다면 포드에게 미국 국가가 왜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는 한국의 삼



이라크 주둔 미군 이라크 침략은 군사력을 이용해 미국 제국주의의 상대적 쇠퇴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성이 영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면 남한 국가와 왜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 다국적 기업들을 보더라도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본국 바깥에서 생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구실이 뭐가 중요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간과합니다. 일단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량의 절반을 본국 바깥에서 해결한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나머지 절반을 본국에서 해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국적 기업에게는 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경제 위기에서 미국 국내의 상황은 포드나 GM 같은 기업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반면 삼성과 현대에게는 한국의 상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생산의 절반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나머지 절반이 특정 국가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특정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 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로서, 어떤 기업이 세계 곳곳에 자산을 두고 있다면 유사시에 누가 그 자산들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전 세계장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독일, 일본, 또는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압력에 의존합니다. 이 점은 WTO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WTO는 기업들의 국제 무역을 규율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WTO 내에서 기업들은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현재 WTO에서 진행중인 논의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여러 개발도상국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러 말입니다. 이 점은 현재 위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GM이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데, 미국에서 GM의 운명을 미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고 유럽에서 GM의 운명은 영국, 독일 등의 정부에 황에서 국가의 구실이 뭐가 중요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힘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 국가는 50년 전보다 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많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니게 됐고, 이를 이용해 미국 자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힘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 국가는 50년 전보다 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많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니게 됐고, 이를 이용해 미국 자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점은 WTO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WTO는 기업들의 국제 무역을 규율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WTO 내에서 기업들은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현재 WTO에서 진행중인 논의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여러 개발도상국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러 말입니다. 이 점은 현재 위기에서 극명하게

본, 그리고 개도국 기업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 갈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 중 누가 이기고 지느냐는 결국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헤게모니의 상대적 쇠퇴

이는 미국 헤게모니의 상대적 쇠퇴 문제로 우리를 다시 인도합니다. 미국 국가가 미국 자본의 이익을 도모하려 하지만 50년 전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들은 소련이 붕괴함에 따라 자신들에게 훨씬 유리한 여건이 펼쳐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같은 나라들은 소련의 위협이 상존하는 동안에는 미국의 지시를 거기에 따랐지만,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는 좀 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은 한층 더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네오콘들이 5~6년 동안 주도권을 잡게 된 데는 바로 이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구상의 요지는 미국이 한 세기 동안 다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세계적 패권을 확립할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부여잡으려면 미국이 우세한 군사력을 이용해 자국의 지배력을 과시해야 한다는 것이 네오콘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21세기에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지

구상의 가장 중요한 천연 자원인 석유 공급원을 통제해야 합니다. 석유 공급원을 통제하려면 중동을 완전히 장악해야 합니다. 단지 미국이 소비할 석유만이 아니라 중국, 인도, 유럽이 소비할 석유도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이 왜 중동 지역의 ‘경비관’으로서 이스라엘에 그토록 의존하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또한 미국이 왜 이라크를 공격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통제하면 세계 석유 공급의 중심지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덕에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에게는 “미국의 새로운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구상의 요지는 미국이 한 세기 동안 다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세계적 패권을 확립할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부여잡으려면 미국이 우세한 군사력을 이용해 자국의 지배력을 과시해야 한다는 것이 네오콘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네오콘들이 5~6년 동안 주도권을 잡게 된 데는 바로 이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구상의 요지는 미국이 한 세기 동안 다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세계적 패권을 확립할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부여잡으려면 미국이 우세한 군사력을 이용해 자국의 지배력을 과시해야 한다는 것이 네오콘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21세기에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지

구상의 가장 중요한 천연 자원인 석유 공급원을 통제해야 합니다. 석유 공급원을 통제하려면 중동을 완전히 장악해야 합니다. 단지 미국이 소비할 석유만이 아니라 중국, 인도, 유럽이 소비할 석유도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이 왜 중동 지역의 ‘경비관’으로서 이스라엘에 그토록 의존하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또한 미국이 왜 이라크를 공격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통제하면 세계 석유 공급의 중심지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덕에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에게는 “미국의 새로운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구상의 요지는 미국이 한 세기 동안 다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세계적 패권을 확립할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부여잡으려면 미국이 우세한 군사력을 이용해 자국의 지배력을 과시해야 한다는 것이 네오콘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1년 사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바마가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미국은 예외 공격적인 네오콘 정책에서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해, 미국 국가의 행을 다른 어느 때보다 과시해야 할 경제 위기의 시점에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 제국주의가 갑자기 평화의 전도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해 준 덕분에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잡게 된 데는 바로 이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구상의 요지는 미국이 한 세기 동안 다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세계적 패권을 확립할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부여잡으려면 미국이 우세한 군사력을 이용해 자국의 지배력을 과시해야 한다는 것이 네오콘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경제만 보더라도 일부 산업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최고입니다. 항공우주 산업, 마이크로소프트로 대변되는 소프트웨어 산

업, 제약 산업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른 몇몇 국가들이 서로 손잡고 미국에 대적할 경우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배자들은 자기 나라가 초강대국이지만 하지만 지역적 힘에 불과하다. 오바마가 평화에 애가하는 동안 미국 폭력기들은 파키스탄 사람들을 계속 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은 동맹국들조차 온전히 단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은 미국의 경비병이긴 하지만 항상 주인 말을 잘 따르지는 않습니다. 아랍 국가 수반들은 오바마와 클린턴에게 이스라엘 정착촌을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지 않으면 중동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소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지배자들은 오바마와 클린턴에게 “우리는 정착촌이 늘어나는 것을 전혀 막을 생각이 없다. 당신들이 그걸 옹호하려 한다면 미국 의회에서 우리가 난리를 칠 것이다” 하고 경고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루지아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지식인들은 중국 경제가 지금 속도로 계속 성장할 경우 20~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를 두려워할 없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특정 국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력이 약해졌다고는 해도 다른 많은 측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만 보더라도 일부 산업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최고입니다. 항공우주 산업, 마이크로소프트로 대변되는 소프트웨어 산

미국 지배자들은 커다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세계를 지배하기에는 힘이 너무 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전선에서 후퇴했다가는 수많은 다른 도전자들에게 더욱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서 미국이 감히 중국을 침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 경제가 지금 속도로 20~30년 동안 계속 성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기적인 경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더 큼니다. 하지만 중국이 언젠가 미국을 따라잡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체가 미국 지배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미국 지배자들은 커다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세계를 지배하기에는 힘이 너무 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전선에서 후퇴했다가는 수많은 다른 도전자들에게 더욱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 정부는 이라크를 침공하고 이란을 위협함으로써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 했습다. 그러나 이제 저들은 이라크에서 철군하는 한편 이란에 유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후퇴하는 것이 참패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한결같이 오바마가 진보양단에 처해 있음을 지적합니다. 오바마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지만 후퇴하기도 난감한 처지입니다.

이는 미국이 지금 당장은 2, 3년 전에 비해 훨씬 덜 경제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때때로 미국이 무자별 공세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말로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평화에 애가하는 동안 미국 폭력기들은 파키스탄 사람들을 계속 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은 동맹국들조차 온전히 단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은 미국의 경비병이긴 하지만 항상 주인 말을 잘 따르지는 않습니다. 아랍 국가 수반들은 오바마와 클린턴에게 이스라엘 정착촌을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지 않으면 중동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소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지배자들은 오바마와 클린턴에게 “우리는 정착촌이 늘어나는 것을 전혀 막을 생각이 없다. 당신들이 그걸 옹호하려 한다면 미국 의회에서 우리가 난리를 칠 것이다” 하고 경고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루지아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지식인들은 중국 경제가 지금 속도로 계속 성장할 경우 20~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를 두려워할 없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특정 국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력이 약해졌다고는 해도 다른 많은 측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만 보더라도 일부 산업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최고입니다. 항공우주 산업, 마이크로소프트로 대변되는 소프트웨어 산



제1차세계대전

특집

정리 발언

▶ 9면에서 이어짐

먼저 미국을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청중 토론 때 한 분이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미국 ‘국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가’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듣는 음악은 거의 모두 미국 음악이며, 제가 읽는 소설 중에도 미국 소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소설에서 배운 점은 미국 자본주의와 미국 국가가 평범한 미국인들을 지속히도 확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즐겨 보는 TV 프로는 ‘와이어’라는 시리즈물인데, 미국 볼티모어 시 슬럼가에서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린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패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자면, 그들은 이윤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닐 뿐 아니라 민주/공화 양당에 막대한 선거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정치도 좌지우지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 저지른 만행을 논하자면 한국 전쟁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지 미국 자본주의에 적대적인 독재자에 맞서 미국 자본주의에 우호적인 독재자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962년 무렵에 미국이 남한의 경제 발전을 허용했던 것도 사실은 그전 10년 동안 남한 경제가 워낙 지지부진했던 탓에 과연 남한이 앞으로 북한에 맞서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를 미국이 걱정할 지경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또 한 나라를 파괴하려고 한국 기업들에게 군수 물자 조달 계약을 몰아줬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미국의 패권 아래 있었던 나라 가운데 남한처럼 경제 발전을 이룩한 사례가 흔치는 않다는 점입니다. 소위 신흥공업국가들의 부상은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제3세계 지역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나은가 하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종종 민주당을 ‘차악’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차악도 악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가 당선할 수 있게 한 분위기 변화가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전 세계인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이해관계를 지닌 국가 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온두라스에서 것처럼 놀라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쫓겨났습니다. 미국은 그 쿠데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출된 그 대통령이 온두라스로 귀국하려 하자 미국 정부는 그의 처신을 비난했습니다! 즉 미국 국가는 그 자신이 과거에 세계 곳곳에 구축해 둔, 미국이 세계를 수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민주적 구조들을 훼손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경향성은 엄연히 존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국경을 가로지르는 체제이고, 그 세계적인 작동을 규율하는 데 국제기구들이 필요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WTO, 세계은행, IMF, 세계보건기구, ILO 등의 국제기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국제 기구에서 벌어지는 협상의 주체



국제 기구도 국가의 뒷받침을 받는다 1999년 WTO 정상회담에 동원된 미국 경찰 (위)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 중국 공군의 수호이27 전투기 (아래)

는 국가들입니다. 또한 이들 기구가 개별 국가의 직접적 통제를 벗어난 관료 구조를 형성할 수는 있어도 개별 국가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에서 구축된 관료 구조에도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 시에는 그러한 관료 구조를 위락파락 하는 기업들이 그러지 못한 기업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1997~98년의 동아시아 경제 위기 때는 IMF의 개입이 한국 자본주의에도 도움이 됐지만 미국 자본주의에는 특히 더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현재 WTO의 도하 라운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전적으로 어느 나라 자본이 이익을 보고 어느 나라 자본이 손해를 보느냐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이 그렇게 크다면 차라리 전쟁을 안 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미

국 지배계급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라크 전쟁에 2조에서 3조 달러를 쏟아 붓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라크 전쟁에 한 톨도 더 쓰지 않는다면 세계 패권을 더 많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고 있고 점점 더 많은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철군했다간 다른 강대국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줄어들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만약 미국이 중동 석유를 통제할 수 없다면 일본이 중국과 손잡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플로어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듯이, 중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는다면 그 동맹은 잠재적으로 미국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공화를 막론하고 미국 지배계급의 어느 분파도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분은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분명 미국의 경제

적 지배력은 50년 전에 비해 크게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강력합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 더는 제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주장하겠습니다. 중국은 아주 미약한 우주항공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중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인데, 그 비행기는 아마도 유럽산이거나 미국산일 것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도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중국산 자동차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드 자동차는 간혹 보입니다. 전 세계 제약 산업도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이 주름잡고 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시장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미국은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도 미국의 우위는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공산품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

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의 수출품 중 다수는 100퍼센트 중국산이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부품을 중국에서 조립한 다음 해외로 수출합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제력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모순적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돈을 빌려 줘야 하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미국과는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과 대등할 정도는 아니어도 미국의 견제 세력은 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3세계의 소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3세계’라는 표현은 오늘날 그다지 유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3세계’의 일부분이었지만 그 후 산업화를 이루어낸 국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체제로 보면 중국, 남한,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는 ‘어지간한 산업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테말라, 파라과이, 온두라스, 볼리비아 등 남미의 많은 나라와 아프리카의 거의 전대륙, 파키스탄과 인도 대부분 지역은 30~40년 전과 다름없이 가난합니다. 인도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는 산업이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지만 다른 지역, 예컨대 인구 1억 7천만의 우타르 프라데시 주 같은 곳은 거의 어떤 산업도 존재하지 않는 절망적인 빈곤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확실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지역에 약간이나마 남아 있는 부를 쥐어 짜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한국은 재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재벌들과 국가는 이미 1962년부터 남한 정치를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재벌들의 관심사는 오직 한국 노동자들과 여타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자신들이 다국적 기업으로 성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45년 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민중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강요했습니다. 이제야말로 한국 노동자와 빈민들이 지난 45년 동안 강탈당한 부를 되찾은 다음 한국 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위해 그 부를 활용할 때입니다. 물론, 막상 그렇게 했을 때 한국 민중은 전 세계의 크고 작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협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민중이 그런 일을 해낸다면 그동안 제국주의에 고통 받아 온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연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에 맞선 세계적 반란이 한국에서 처음 시작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운동은 자본주의적 축적 논리에 저항하는 전 세계적 운동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경제적 착취에 맞선 저항일 뿐 아니라 전쟁에 맞선 저항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취·번역 천경록

책갈피 문고 |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 ④

크리스 하먼의 새로운 제국주의론

크리스 하먼 지음
이수현 옮김 | 책갈피 | 192쪽 | 5,900원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정성진, 장시복, 크리스 하먼, 로버트 브레너, 짐 킨케이드 공저
천경록, 이수현 공역 | 책갈피 | 359쪽 | 13,000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작지만 소중한 성과

처음 이명박 정부가 그간 일부 진보단체들이 요구해 온 “등록금 후불제”를 받아들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적잖이 놀랐다. 그러나 곰곰히 뜯어보니 <레프트21> 11호에서 선영 동지의 지적처럼 기만에 가까운 정책이었다.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연소득 기준을 1천5백9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한다.

대학 4년간 연간 9백만 원씩 3천6백만 원을 빌린 대학생이 대학 입학 7년 후 취직했다고 치면, 전체 상환액은 4천4백10만 원(원금 3천6백만 원+이자 8백10만 원)이 된다. 최근 대출 초임연봉이 “10년 전 가격”이 돼버려, 연봉을 1천8백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적어도 몇 년간은 초 저소득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는 많은 단체들이 지적하듯, 등록금 절대액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이명박 정부 자신이 약속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고 나아가 무상교육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당장 마련하기 힘든 대학생들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정책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적어도 입학 때 진 빛의 이자를 갚지 못해 대학 3, 4학년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당장 등록금 마련을 위해 휴학하는 일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파 정부는 몇 년간이라도 이자를 대납하기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나는 이번 정책발표를 그간 운동진영이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여러 악행에 따른 여론악화를 잠시나마 반등시키기 위해 내놓은 조그만 양보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간 ‘등록금 넷’ 단체를 결성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노동·사회단체들까지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것과 2008년 촛불시위가 시작되기 직전 1만 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시청광장을 가득 메우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해 멋들어진 거리행진을 벌인 것을 놓쳐선 안 된다. 그 결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은 매우 높아졌다. 우리는 이번엔 얻어낸 성과가 상당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번 성과를 더 많은 요구를 얻어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강영만

강박적 외모관리의 배경

지난 호 독자편지에서 류민희 동지는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 여전히 많은 기업들에 퍼져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지적했다. 하지만 “보통의 노동계급 여성들은 ‘인생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하게’ 취업하고 싶어서” 외모를 가꾼다는 설명은 다소 단순한 설명이다.

물론 “신데렐라가 되고 싶다는 ‘큰 꿈’ 보다는 ‘취업하고 싶어서’ 또는 ‘사랑받고 싶어서’라는 훨씬 소박한 꿈을 갖고” 다이어트나 성형을 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출세를 위해서 외모가 꾸기에 투신하는 사람들도 분명 상당수 존재한다. 미인대회나 모델 선발대회, 가수나 탤런트 선발대회 등에 젊은 여성들(노동계급 여성들도 포함된)이

많이 몰리는 것을 보라.

사실 ‘섹시열풍’을 다룬 내 글에서 ‘인생역전’ 얘기를 한 맥락은 여성들의 다이어트 동기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나 성형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부추기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비판하는 맥락이었다.

다이어트나 성형 수술을 하는 여성들의 동기는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오늘날 여성 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매우 광범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 비하를 낳고 단지 고용 차별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차별로 이어진다. 여성을 한낱 눈요깃거리로 삼는 온갖 기괴한 방식들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정진희

쌍용차 파업과 진보정당의 구실

전지운 기자가 <레프트21> 12호에 쓴 쌍용차 파업 평가를 잘 읽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영웅적 저항에 비해 꽤 아쉬운 결과이지만 불리한 조건에서 선방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또, 이번 파업의 약점으로 급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호소가 없었던 것을 비판한 것도 옳바랐다.

그런데 이번 파업에서 진보정당들이 한 구실에 대해 “매우 헌신적으로 연대했다”고만 평가한 것은 부족한 평가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당직자들은 공장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경찰 폭력에 용감하게 맞서고 거리 홍보를 열심히 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중앙당대의원 결의대회를 쌍용차 공장 앞으로 잡는 등 쌍용차 집회에 당원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

전술

하지만 진보정당들은 이 파업에서 적절한 전술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약점을 드러냈다. 두 정당 모두 공기업화 대신 공적자금 투입을 계속 요구했다. 또, 급속노조와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연대파업 조직을 촉구하지 않았다(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기반이 있는 두 진보정당들이 그런 호소를 했다면 급속노조와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상당한 압력이 뻤을 뻔대 말이다).

진보정당들은 그 대신 정부와 사측에 ‘노사대타협’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중재단 구성을 호소했고, 권영길 의원을 중심으로 중재노력에 힘썼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이 강경 대응태세를 고수하고 경찰력과 구사대를 투입해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대타협 촉구는 공허하고 무기력했다.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 없이는 실질적인 양보를 따내기 어렵다. 무릇 진정한 노동자 정당이라면 중재자 노릇을 자처하기보다 아래로부터 투쟁을 더욱 발전시키는 지도적 구실을 자임해야 한다.

정진희

존 몰리뉴의 “사회주의는 가능하다”를 읽고

<레프트21>에 연재되는 존 몰리뉴의 칼럼은 항상 쉽고 명쾌해 맑스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12호에 실린 “사회주의는 가능하다” 칼럼 역시 나에게 매우 유익했다. 민주적 계획에 따른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기술한 이번 칼럼은 많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 믿는다.

그간 활동해 오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을 한테서 사회주의에 대한 갖가지 질문들을 받았다. 특히 ‘모든 것이 분배된다면, 누가 힘들게 일하려 하겠는가?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나와 토론한 주변 사람들의 단골메뉴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학교에 가는 것을 고통스러워 한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내일이 월요일”이라는TV 광고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누구나 금요일 오후만 되면 기분이 ‘굿’ 좋아지고 일요일 오후가 되면 웬지 모를 불안감을 느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결정권 없이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소외 때문이 아닐까?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받으려면 조용히 일만 해야 하는 현실이 우리를 하여금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국가,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가 일하는 조그만 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사실상 없다. 회사의 경영은 사장과 이사들이 해 왔는데도 구조조정 같은 고통은 ‘함께’ 나눠야 한다. 내가 일한 결과로 만들어진 부가가치는 나보다 사장과 대주주들의 호주머니를 채운다. 국가나 지역사회 운영은 어떤가?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우리에게 4년이나 5년마다 10초도 채 걸리지 않는 투표할 권리가 전부 아닌가? 그 잠시가 지나가면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고치는 일은 ‘곰뽕지를 다신 분들’의 몫이다. 우리는 그저 한탄하거나 관심을 아예 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몰리뉴가 지적했듯이 1871년

파리코뮌에서처럼 우리들이 모든 공적자들을 선출하고 소환할 수 있다면, 또 러시아 혁명의 경험처럼 집단적 토론을 통해 작업장과 사회를 우리들이 운영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의미있고 보람찰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사회에서는 이윤만을 쫓는 사회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공급해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민주적 사회 운영과 충분한 의식주 공급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생산적으로 사회운영에 동참하고 필요한 노동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전체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의타심만 기르고 교육상 좋지 않다고 본다”며 무상급식 예산을 깎아 버린 지배자들에게 이 사회를 계속 맡겨 놓는 것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의욕을 잃게 하고 고통을 더 가중시킬 뿐이다.

강영만

맑시즘2009에 다녀와서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포스터를 보고 참석하게 되었는데, 어느 것 하나 놓칠 것 없는 알찬 강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별다른 생각 없이, 별다른 비판 없이,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기 바쁜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최근에야 기본적인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내용도, 조금은 생경하게 느껴지는 내용도 있었지만, 다수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과연 ‘당연’한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계속 좋은 공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 <레프트21> 11호를 보시오.]

꽃내기 참가자 posy4u@gmail.com

쌍용차 파업 평가 토론회에 다녀와서

쌍용차 파업에서 진짜 부족했던 것은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가 20일 주최한 “쌍용차 투쟁 —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에서 발제를 했다.

이종탁 부소장은 쌍용차 파업이 “경제 위기로 인한 기업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 자본의 시도에 맞선 투쟁”이었으며 “노조가 단순한 반대자 이상의 역할을 했고” “다양한 사회적 연대”가 형성된 점이 의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쌍용차 파업이 “단사의 고용 투쟁으로만 전개되면서 정치적 성격이 부각되기 힘들었다”며 “대정부 사회 투쟁이 부족했던 점”을 아쉬움으로 평가했다. “별도의 정치 전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 부소장이 쌍용차 파업의 정치적 성격과 정치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옳다. 이날 토론회에서 많은 토론자들이 지적했듯이 경제 공황기에 파산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고용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요구하며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소장의 말대로 이번 투쟁의 의의가 “경제 위기로 인한 기업의 위기를 노

동자에게 전가하려 한 자본의 시도에 맞선 투쟁”에 있다면 그 해결책 역시 자본이 책임지도록 해야 일관된 견해일 것이다.

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대안은 쌍용차 위기의 주범인 ‘먹튀’ 상하이차와 ‘묻지마 매각’을 추진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동시에 파산 기업을 낳을 수밖에 없는 자동차산업의 세계적 과잉생산에 대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소장은 쌍용차 노조가 “디젤 및 디젤 하이브리드 분야의 경쟁력을 근거로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기하고 기업 체질 개선에 대한 주장”을 한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또, 노조가 임금과 노동조건 양보로 “사회적 설득력”을 높여야 했다고 주장한다. 또 점거파업 전술 탓에 투쟁이 지역(평택)과 단사(쌍용차)에 갇혀 버렸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업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 회복하기를 대안으로 삼는다면 파업의 논리는 자기 모순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쌍용차의 경쟁력 강화가 자

동차 산업의 과잉 생산이라는 근본 문제에서 해답이 되지도 못한다. 게다가 ‘노조의 선제적 양보안’은 무시당했고, 저들의 자신감만 키워줬을 뿐이다.

그 점에서 이 부소장이 내세운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화”보다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생산 기지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하는 공기업화” 요구가 더 일관되고 효과적인 “자본의 책임 묻기”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대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적 자본의 소유권에 도전해야 하는 공기업화 논의를 진보 진영 다수가 꺼렸기 때문이다.

이 부소장이 정책 측면에서 주도했던 자동차법대위조차 경쟁력 논리를 수용하는 ‘한시적 공기업화’ 이상을 말하지 못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역시 공기업화 요구를 회피했다. 투쟁의 막바지에 모호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을 뿐이다.

이것이 진보 진영의 연대가 이 부소장이 지적한 대로 “단사 투쟁에 몸 대주기”처럼만 ‘보였던’ 이유다.

그래서 문제는 점거 파업 전술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쌍용차 파업이 여론의 정점에 선 것은 순전히 사측과 정부의 공격에 맞선 점거 파업의 견고함 때문이었다. 점거 파업은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강력한 압박이 됐다. 또 “나가라”는 요구에 공장 점거로 맞서는 투쟁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고용보장”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효과도 있었다. 따라서 점거 파업을 지원하고 엄호하기 위한 “몸대주기” 연대 역시 매우 중요했다. 정치적 연대 투쟁은 여기서 발전해야 했다.

부족했던 것은 “파산 기업의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보장”이라는 대안이었다. 이런 요구야말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다른 사회 세력들에게 쌍용차 투쟁에 적극 연대할 동기 부여를 할 수 있었다.

쌍용차 파업이 남긴 교훈은 경제 위기 시에 “부도 기업의 공기업화” 같은 대안적 강령으로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건설하여 대정부 정치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 점에서 이 부소장의 평가는 아쉽다. 무엇보다 정치 투쟁을 말하면서 정부와 정면 대결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김문성

진보적 애국주의 논쟁

좌파가 진보적 애국주의를 수용해야 하는가

최근 애국주의 논쟁이 한창이다. 대표적으로 《시민과 세계》 제15호에 실린 영남대 장은주 교수의 논문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 — ‘민주적 애국주의’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논쟁을 촉발시켰다.

논쟁을 소개한 〈한겨레〉는 “애국”이 좌파진영에서 금기의 언어였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애국을 수식어로 하는 각종 좌파 단체들이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좌파의 주류는 애국을 표어로 삼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진보진영의 애국주의는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 과거 좌파가 애국을 말했을 때 그것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긍정이 아닌 부정을 통한 애국이었고, 모종의 다른 대안 체제에 대한 요구였다. 그 대안이 옳은 것이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말이다.

이에 비해 최근 애국주의를 주창하는 세력은 대한민국 체제의 정당성을 적극 승인한다는 점에서 훨씬 온건해졌다. 가령, 주대환 씨는 뉴라이트와 교감하면서 ‘너는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며 좌파에게 정체성을 밝히라고 끊임없이 압박지른다.

장은주 교수의 애국주의가 뉴라이트에 대한 적극적 반대라는 점에서 주대환의 그것보다 퇴행적이지는 않지만, 그의 정치적 결론도 결국 이런 흐름에서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지향은 말하자면 … 하나의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역사적 합의였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은 부족하고 미완인 채로나마 그런 합의 실현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민의 역사적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당시 건국은 역사적 합의이기는커녕 주민 수만 명을 문자 그대로 학살하는 과정이었다. 또,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 인민위원회 등 아래로부터 ‘건국’ 흐름을 제압한 미군정과 우파의 위로부터 프로젝트가 강압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이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1987년 헌법도 마찬가지다. 1987년 6월 항쟁의 여파로 대통령 직선제가 명문화됐지만 당시 개헌 과정에서 민중운동 진영은 철저히 배제됐다. 더한층의 급진화를 차단하려는 군부와 보수 야당의 기만적 타협의 성격이 이 헌법에 반영돼 있다.

장은주 교수는 “애국주의가 … 우파들이 즐겨 이용하는 정치적 수단이라고 해서 진보정치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며 “진보정치는 오히려 올바른 애국주의로 무장하고서 우파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 후에 “우익들에게만 애국심이 있는 것처럼 방치해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고 말한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의 주장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런 식의 애국주의 경쟁으로 진보 또는 좌파가 우파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을까? 가장 비극적 사례는 민족주의에 편승해 나치의 인기를 따라잡으려 했던 1930년대 초반 독일공산당일 것이다. 공산당의 애국주의는 결국 나치의 힘을 강화시켰을 뿐이다.

1948년 건국은 인민의 역사적 합의가 아니다

장은주 교수는 진보적 애국주의가 헌법 애국주의라고 말한다. 즉, 민주주의,



지난해 5월 촛불 시위 촛불 항쟁 이면의 이윤지상주의 반대, 진정한 민주주의 요구 등을 단순한 애국으로 뭉뚱그릴 수 없다.

사진 이미지

인권, 자유와 평등과 같은 헌법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랑이 그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는 하버마스의 헌법 애국주의를 빌린 것인데, 하버마스의 헌법 애국주의는 주로 나치 등 우파 민족주의에 맞서 ‘민주적 보편 가치’를 수호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입헌적 민주공화국 체제를 위협하는 나치를 적극적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장은주 교수의 애국주의가 (종족적)민족주의나 전체주의와 다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익들도 하버마스의 헌법 애국주의 개념을 이용해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친북좌파나 극좌파를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국가보안법 존치 논리인 ‘전투적 자유주의’를 합리화하는 논리다. 헌법 애국주의가 대중적 논쟁 차원에서 진보진영의 전유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장은주 씨의 주장이 주관적 희망인 까닭이다.

또, 하버마스의 헌법의 보편적 가치 옹호는 실천의 시험대에서 심하게 비틀거렸다. 하버마스는 “인권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습을 환영했고, 헌법 애국주의를 유럽연합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생각으로 신자유주의 공세를 강화할 유럽헌법에 찬성한 바 있다.

헌법 애국주의는 민주공화주의의 논의와 직결된다. 최근 민주공화국에 대한 논의들은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던 점, 특히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탄압 상황을 반영한 듯하다. 이 점에서 공화주의 논의에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

그와 동시에, 민주공화주의에는 근본적 결함이 있다. 많은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자들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화국 구

성원들을 전제로 삼는다. 물론, 그들도 이것이 완성된 형태가 아니며 민주 헌법의 존재 자체가 이를 보장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장은주 씨도 “우리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이념의 실현되지 않은 가치 및 의미 잉여에 대한 환기와 새로운 해석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의 결과”라고 단서를 단다.

그러나 그는 이 공화국 체제의 진정한 분열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즉 기회의 평등, 공정한 분배 등을 얘기하지만 공화국이 기반하는 착취 체제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노동자들은 법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생산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착취적 생산에 기반을 두는 공화국이 그 구성원들에게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보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또, 계급으로 분열돼 있기 때문에 장은주 교수의 생각과는 달리 민주공화국은 중립적일 수 없는 것이다.

권혁범 교수가 비판하듯이 장은주 교수는 “국가의 괴물적 속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물론 권혁범 교수의 대안, 즉 국가로부터의 탈주 전략, 국민국가 간 경쟁 체제를 폐지하지 않고 단지 초월해 있는 세계시민사회와 월경적 주체 등은 공상적이다).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이 보여줬듯이, 공화국 국가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사회화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촛불 항쟁은 애국주의적이었나

이 점에서 헌법 애국주의는 결국 자본주의적 국가에 대한 애국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장은주 교수와 마찬가지로 하버마스의 헌법 애국주의를 주창

하는 유시민은 이 점을 좀더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가 보기에 헌법 애국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국가의 다원주의적 경쟁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파와 좌파의 차이는 애국하기 위한 방법상의 차이로 축소된다. 한국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좌파의 애국주의의 답론은 ‘민주공화국’을 떠받치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동계급이 희생해야 한다는 우파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은 좌파의 애국주의 이데올로기 역시 저항 운동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은주 교수는 촛불 시위에서 시위자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시위가 애국주의적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단순화다. 물론 많은 저항운동에서 참가자들은 애국이나 민족과 같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에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촛불 시위의 이면에 있던 강력한 반자본주의적 정서, 국의 논리 거부, 반정부,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등을 단순히 애국으로 뭉뚱그릴 수는 없다. 만약 이 시위의 주된 구호가 애국과 국익으로 설정됐다면 우파가 시위대의 논리를 공격할 기회를 더 자주 얻게 됐을 것이다.

요컨대, 애국주의는 어떤 경우라도 저항운동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 놓는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애국주의 역시 마찬가지다. 저항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애국주의는 선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버려야 할 낡은 관념이다.

한규한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노동자들은 법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생산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착취적 생산에 기반을 두는 공화국이 그 구성원들에게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보장할 수는 없다.

학생운동

대학생행동연대 상반기 평가 토론회

운동을 전진시킬 수 있는 연대체가 돼야 한다

8월 22일,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주최로 'MB심판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행동연대(이하 행동연대)' 발족 3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대련 간부 수련회 프로그램 중 일부였던 이 토론회에는 1백50여 명이 넘는 한대련 소속 학생회 간부들이 참가해 한대련 의장, 대학생 다함께,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회 등 발표자들의 주장을 경청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대련 이원기 의장은 행동연대를 통해 광범한 반이명박 정서를 대변하는 학생운동의 단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현재 행동연대에는 44개 대학 학생회와 27개 대학생 단체가 가입해 있는데, 이는 서울 지역의 여러 기층 단체들과 비서울지역 단체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또 행동연대가 특정 정점이나 사안별로 모인 그 이전의 다른 연대체들과 달리 이명박 정부에 반대해 한국 사회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지속적 연대 기구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4백여 명이 참가한 7월 2차 범국민대회 사전집회, 9백여 명이 참가한 8월 14일 행동연대 문화제 등 그동안 해온 활동들을 돌아보며 행동연대가 이제까지 잘해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대련 의장은 이런 성과를 잘 발전시켜 이명박 정부 동안 계속될 반민주·반민생 정책에 맞서 대학생들이 함께 잘 싸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회 장경태 위원장은 각 단체들이 각자의 주장과 실천을 각기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좋겠지만,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회가 행동연대의 지향과 다른 점이 있는데 함께하는 것이 맞냐고 제기하지만, 자신은 차이가 있어도 수용하는 입장에서 단결해야 한다고 답하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 아니고 84석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민주당이 자신이 보기에도 아쉬운 점들이 있으므로 원외에서 대학생들의 구실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시민사회운동을 지원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다함께의 입장을 대표해 발제한 나는 단결의 의의라는 측면에서 행동연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공감하면

서, 나아가 행동연대가 진보적 학생들의 구심점으로 더 성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 주장했다.

행동연대가 열의있게 참가한 미디어 악법 반대 투쟁의 경우, 국회에서 개악안이 날치기 통과되기 전까지 사실 운동진영에서 유의미한 대중투쟁이 조직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노무현 49재가 끝나고 국회로 복귀한 뒤 사실상 한나라당과 별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악법 반대 투쟁이 지지부진했는데, 운동 진영은 이런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의존적이었다. 운동 진영은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일관되게 싸우지 못할 때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독립적인 행동을 건설했어야 했다.

행동연대가 나서서 이런 과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했다면 운동을 전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행동연대 내 좌파인 대학생 다함께나 한대련은 행동연대가 이런 과제를 수행할 것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행동연대가 단결을 유지하려면 논쟁을 삼가고 낮은 수준의 정치적 주장과 행동만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정된 일정에 참가만 할 뿐 운동을 전진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이 점은 자기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할 일이다.

쌍용차 쟁점에서도 행동연대는 비슷한 종류의 문제를 겪었다. 한대련 동지들은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회나 대학생 종교단체 등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압도돼, 쌍용차 투쟁 연대 활동을 행동연대의 과제로 삼는 것을 주저했다. 대학생 다함께도 이런 압력에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행동연대는 이명박의 반서민정책에 맞서 싸운다는 결정을 해 놓고도, 정작 쌍용차 투쟁이 가장 첨예해졌을 때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마비됐다. 한대련과 대학생 다함께 등이 각자의 단체로서는 팽백 공장 앞 집회에 참가했지만 말이다.

2008년 촛불항쟁을 이끌었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처럼 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필요한 전술을 진취적으로 내놓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반기에 중요한 투쟁들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모두가 동의할 만한 낮은 수준의 합의를 추수하기보다 운동을 이끌기 위해 토론과 논쟁을 벌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단결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발제 후에는 자유토론이 활발하게 이



사진 제공: 민중간담회

7월 19일 대학생행동연대 주최 집회 행동연대의 전진을 위해서는 단순한 합의주의를 넘어 운동의 과제를 둘러싼 논쟁이 필요하다

어졌다. 부산에서 온 활동가들은 민주당 학생특별위원장에게 '민주당에 대한 광범한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민주당이] 원외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떤지' 등을 질문했다.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장은 "사실 열린우리당이 과오가 많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대중운동에 대해서는 "대중적 기반이 없어 운동 건설에는 한계가 있

고 법안 발의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자신들의 과제가 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

한편, 이명박 이후의 대안이 불분명해 박근혜 등이 집권할 수도 있는데 행동연대 차원에서 대안 마련을 위한 이념적 통일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제기도 있었다.

한대련 이원기 의장은 "연대체이므로 대안에 대한 이념적 통합은 불가능하고, 이명박 이후의 대안 역시 논의에 한계가 있다"며 "안 그래도 대안 때문에 분열하고 있는데 행동연대 차원에서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그는 "선거에서 특정 인물 지지 등은 어렵고 기준 정도는 제시할 수도 있겠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물론 민주당 학생조직과 다함께 같은 급진좌파 단체가 공존하고 있는 행동연대가 선거대안까지 통일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선거대안 문제가 통일되지 않아도 이명박의 반민주·반서민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럼에도 누가 이명박에 맞설 올바른 대안인가,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대안을 건설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은 행동연대 내에서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선거대안 문제는 진보진영 전체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나는 행동연대가 한나라당 반대라는 구호 속에 사실상 민주당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를 내포하는 방식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토론은 활발했지만, 자유토론이 마무리될 때까지 행동연대의 과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동아대 생명대 학생회장이 "반MB를 걸고 각 단체가 자신의 방법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행동연대를 강화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고 의견을 밝힌 정도였다.

그러나 행동연대는 단순히 각 단체들의 합이 아니므로, 각 단체들이 각자 열심히 하면 된다는 주장은 행동연대 차원의 과제를 대신할 수 없다.

행동연대가 이명박에 맞선 운동을 진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토론과 논쟁이 필요할 듯하다. 대학생 다함께는 행동연대가 더 영향력 있고 유의미한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좌파적 구심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범진
대학생행동연대 공동상황실장, 대학생 다함께 정치위원

한대련 전학대회 학생들이 이명박 퇴진 운동을 결의하다

8월 22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국학생대표자회의에 모인 전국 2백여 명의 학생회 활동가들은 이명박 퇴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 날 모인 전국의 한대련 활동가들은 "이명박을 고치는 것보다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며 "앞으로의 운동이 더 이상 정권에 요구하는 수준의 운동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새로운 높이의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학내에서 이명박 불신임 총투표와 불신임 선언 등을 진행하고 9월 29일 전국적인 총궐기를 치를 계획이다. 이명박 퇴진을 위해 앞

장서서 싸우겠다고 결의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고 고무적이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퇴진운동을 하기로 결정한 후 이에 대한 부정적 비판과 논쟁이 있었다. <시사IN>은 "이명박 정부는 매우 허악한 정부"라면서도 이명박 퇴진 구호가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오히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통일뉴스> 민경우 기자도 "현정 질서에 대한 존중감이 상당 부분 안착화"되어 있어 전민항쟁을 통한 이명박 퇴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비판적 전망과는 대조적으로, 한대련의 퇴진 운동 계획

은 학생 대표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이것은 대학생들의 이명박 퇴진 열망을 명확히 보여 줬다.

퇴진시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퇴진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들은 대중들 안에 잠재돼 있는 정권에 대한 분노와 그 분출을 위해 투쟁의 방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운동의 요구를 이뤄낼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았으나 투쟁 과정에서 잠재된 분노의 분출로 실질적인 요구를 달성할 수 있었던 1987년 6월 항쟁과 1960년 4.19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날 전학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

중에는 퇴진 이후의 대안에 대한 확신이 없어 퇴진 구호를 외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학생은 "퇴진 구호를 내거는 것에 약간의 회의가 있고, 퇴진 이후의 전망에 대해 비판적"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련 의장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명박 퇴진 운동의 당위성이 훼손되지는 않"으며, "대중 투쟁 속에서 대안이 자라날 것"이라고 답했다.

물론 이명박만 물러난다고 해서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퇴진을 이루려면 작년 촛불운동 이상의 대중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촛불항쟁에서 대중들의 급진화를 보았

듯이, 퇴진 투쟁에서도 대중 의식의 급진화가 큰 속도로 일어날 수 있다. 이명박 이후의 정권이 누구이든 간에 투쟁 과정에서 대중과 노동자들 간의 광범한 연대로 정권 퇴진이 실현된다면, 이후 노동자들은 종전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배계급에게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총체적 반대의 대상인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해 과감히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은 정말 지지할 만하다. 이 퇴진 운동이 광범한 대중과 노동자들 속으로도 확산돼 반드시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민경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집행부

《르포, 절망의 일본열도》

도대체 지금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르포, 절망의 일본열도》

가미타 사토시 지음, 신지니출판사, 264쪽, 14,000원

8월 30일 총선거(중의원선거)를 앞둔 일본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기대로 가득하다.

일본의 여러 언론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전체 중의원 의석 4백80석 중 과반수가 넘는 3백20석을 무난히 달성해 압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반면 장기 집권에 온 자민당은 1백 석을 간신히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자민당 참패, 민주당 압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 도쿄도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보수화, 군국주의로의 회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신과 분노,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 속에서 치러진다.

40년 넘게 일본의 신자유주의와 보수화, 군국주의로의 회귀 시도를 강력히 비판해 온 저자는 서문에서 “내가 이 책에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일본 각지에서 권력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저항하는 이들의 존재”라며 그동안 한국에서는 잘 소개되지 않은 일본 노동자·서민의 척박한 삶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들을 소개하고 있다.



격차사회의 현실 일본 오사카 고가도로 아래 늘어난 노숙자 천막들

2004년 개정된 일본의 노동자파견법은 대량의 파견 노동자와 이들에 대한 폭력조직의 중간착취를 합법화시켰다. 이들은 고용불안뿐 아니라 노숙자로 전락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불안과 체불임금, 파견회사의 폭력과 살인에 노출돼 있다.

파견직에서도 쫓겨난 노숙자들은 신주쿠,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형성된 텐트촌, 파견마을로 흘러든다. 노숙자들은 언제나 불법파견업체의 먹잇감이다. 이들은 만성적인 임금체불과 폭력에도 불구

하고 거리에서 얼어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파견업체가 소개해 준 ‘한바(유료 숙식이 제공되는 노무자 합숙소)’로 향하는 봉고차에 올라탄다.

“노숙자는 인간쓰레기니까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해 노숙자를 의사시킨 16살 소년들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노숙자의 머리를 짓밟아 살해한 한 고등학생 등 “노숙자에 대한 소년들의 증오는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공포로 점점 증폭되고 있다.”

도요타 방식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우체국 민영화의 모델이 된 일본의 우정 민영화는 엄청난 정리해고 때문에 효율 향상은 커녕 노동강도 강화로 남은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늘어나는 등 생명의 위기만 확대하고 있다. 이는 모두 예견된 일이었다.

고용 노동자 6만여 명 중 1만 명이 비정규직이라며 너스레를 떠는 도요타자동차 본사가 있는 곳은 도요타시 도요타초 1번지다. 도요타 그룹의 아무런 특색

없는 ‘도요타’라는 성(姓)은 “시의 이름이 됐고 회사 이름이 동네 이름이 됐다.” “마른 걸레도 짜라”는 도요타식 이윤추구의 모토는 ‘도요타 방식’으로 합리화돼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2006년 개악된 교육기본법은 “전쟁을 위한 ‘교육’을 허용”하는 ‘애국심 교육법’이다.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일선 학교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강요하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제창은 이들에 대한 사상검증의 수단이 되고 있다. 저항하면 가차 없이 체포되거나 면책, 해직당한다.

《르포, 절망의 일본열도》에서 보여 주는 일본 사회는 ‘절망’적이다. 그러나 “낮은 권위와 가치관의 강요가 새로운 세대의 집단행동을 낳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투쟁, 교육기본법 개악에 맞선 투쟁에서 “다시는 제자들을 전정터에 보내지 말라”고 외친 교사들, 미군 재편 전략으로 신기지 건설이 추진중인 오키나와 헤노코 지역 주민들의 목숨을 건 해상 투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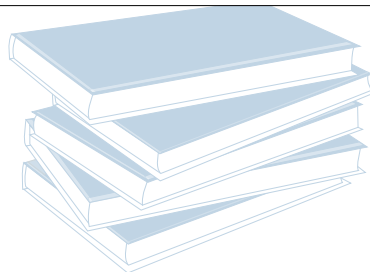
오는 8월 30일 일본 총선은 일본 노동자들이 자민당 장기집권체제와 앞서 언급한 일련의 정책들을 심판하는 장이 될 것이다.

저자가 전하고 싶다는 ‘저항’과 ‘연대’가 르포라는 형식상의 한계로 단편적이라는 점과 일본 운동 내 주류에 대한 저자의 실망과 환멸 때문에 전체 일본 운동을 이해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도대체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번 정권교체의 원동력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 보기 바란다.

최미선

《다윈주의와 지적 설계론》

보수적 창조론자들에 맞선 유물론 투쟁의 역사



《다윈주의와 지적 설계론》

존 벨라미 포스터 외, 인간씨랑, 291쪽, 15,000원

2009년은 찰스 다윈 탄생 2백 주년이자 《종의 기원》이 출판된 지 1백50주년 되는 해다. 마치 진화론 자체가 진화한 것처럼 유례없이 진화론에 대한 저작과 학술 활동이 붐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진화론이 접목되고 재구성되고 있다(심지어 다윈학회에서 ‘주역과 진화론’, ‘이제마의 사상의학과 진화론’이라는 세션까지 선보였다).

이런 학계의 흐름은 21세기에 더욱 확장되고 굳건히 인정받는 다윈주의의 위상을 잘 보여 준다. 하지만 이것은 진화론의 이마만 본 것이다. 진화론의 아랫도리를 보면 창조론과 마주하게 된다. 창조론은 손에 땀을 닦고 지적 설계론이라는 새로운 장갑을 끼고 강력하게 양손으로 진화론의 발목을 잡아당기고 있다. 《다윈주의

와 지적 설계론》은 이러한 진화론과 창조론이 첨예하게 대립한 역사를 보여 주고, 실제 그 논쟁에 직접 뛰어드는 책이다.

18~19세기를 거쳐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발견을 하고 자연과학자들이 생명체 진화를 증명한 것은 당시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창조론자들의 믿음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지구가 최근에 생성되었고’ 자연의 질서는 때때로 노아의 홍수처럼 ‘신성한 존재의 개입에 의해 재정비되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말이다.

이러한 믿음은 다윈의 점진론을 필두로 19세기 과학자들에 의해 ‘자연은 완만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이 확립되자 급격히 설자리를 잃기 시작했다. 이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창조론적 관점이나 점진주의와는 달리, ‘그 변화는 필연적이기는 하지만 완만하고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안정 상태가 지난 뒤 매우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학계의 발견과 보완을 통해 자연과 인간 역사의 복잡성에는 점진론적 관점이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두 가지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는 최근에 더욱 구체화되어 나일스 엘드리지와 스티븐 굴드가 화석기록을 바탕으로 단속적 평형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즉 자연계의 변화에 대한 다윈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관점을 통합해 생명체 진화의 역사는 ‘오랜 기간의 안정 상태 뒤에 지질학적인 짧은 기간의 변화가 이어진다’는 이론을 내놓은 것이다. 단속적 평형 이론은 고생물학, 유전학, 그리고 진화생물학과 관련된 다른 분야의 연구에도 광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로 다윈주의적 과정은 지질학적으로 짧은 시간(예컨대 수만 년)동안에 새로운 종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당시의 화석기록으로 입증됐다. 화석기록에 나타나는 새로운 종의 “돌연한” 등장이 진화론과 배치된다는 창조론자들의 주장은 단속적 평형 이론과 거기서 영향을 받은 연구 결과에 의해 논거를 잃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설 땅마저 위태롭게 된 것이다.

단속적 평형

상대진영인 지적 설계론을 살펴보자. 지적 설계론의 학술 내용은 이 진영의 대표 선수인 웬스키의 스티븐 굴드에 대한 비판에 잘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설계론자는 모두 생물학적 구조가 설계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지 않는다.” 즉 일부는 신의 최초 설계 이후에 진화론적으로 적응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 속의 기형과 무자비함이 신성한 섭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악의 문제를 무

시하고 과학과 신학을 뒤섞어 놓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의 주장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지적 설계론 자체가 과학과 신학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명위의 싸움만으로는 이 전체적인 싸움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지적 설계론 지지자들은 과학적 합의를 무시하고 광범위한 대중을 상대로 창조론적 관점을 보급함으로써 지지세력을 모으려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사회의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아니다. 이 운동은 로널드 레이건, 에드윈 미주, 조지 길더, 윌리엄 버클리, 톰 드레이, 존 매케인, 조지 W 부시 같은 영향력 있는 보수적 정치가들과 여론 형성자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지적 설계론의 기지인 디스커버리 연구소는 보수적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한 부서로 출발했다가 독립된 기관이다. 이 디스커버리 연구소의 과학 문화 재건 센터에서 기초한 1999년의 ‘췌기 문서’를 보면 이들의 정체성이 잘 나타나 있다.

“유물주의는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유독한 변종을 낳았다. 디스커버리 연구소의 과학문화 재건 센터는 다음 아닌 유물주의와 그 문화적 유산의 타도를 추구한다.”

필립 존슨이 한 말을 빌리자면 “현대 문화의 지배적 철학(즉 자연주의)”을 지적

설계론이란 새로운 지배적 철학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표인 것이다.

이 책은 창조론과의 논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유물주의의 대표선수인 에피쿠로스, 다윈, 마르크스, 프로이트의 주장을 따라서 전개되고 있어 각 사람들의 논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논쟁의 전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훌륭한 책임은 틀림없지만 논쟁의 역사와 양진영의 논리에 대한 내용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어 다윈의 이론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할 것이다.

이 책의 가장 큰 모티는 《마르크스의 생태학》으로 유명한 존 벨라미 포스터가 공저자인 만큼) 책의 여러 부분에서 마르크스가 유물주의를 방어하는 싸움에 기여한 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도 마르크스가 창조론에 날린 ‘레프트 훅’을 인용하며 창조론을 비판하고 있다.

“역사를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심장 속에 마지막 한 방울의 피가 남아 있는 한 철학은 결코 지지치 않고 그 적대자들을 향하여 에피쿠로스의 주장을 인용하여 외칠 것이다: ‘진정으로 불경한 자는 군중이 경배하는 신들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군중이 신들에 대해 믿는 바를 긍정해 주는 자’라고.”

최규진 의학사 전공

기획연재/서평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④

자본주의는 왜 정의롭지 못한 체제인가

자본주의 체제의 법률 제도가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유전무죄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WP) 활동가 팻 스택이 그 이유를 살펴본다.

밥 딜런의 노래 “해티 캐롤의 외로운 죽음”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사법 제도를 정당화하는 핵심 메시지가 담긴 노랫말로 시작한다.

명예로운 법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탕탕 내리치네,
만인이 평등하고 법정이 공정함을 보여 주려고,
법전의 문구를 멋대로 무시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귀족들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일단 경찰에게 붙잡히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흔히들 사법 제도는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고 동료 시민들[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고 말한다.

‘정의로운 사법 제도’는 우리가 사는 체제가 투영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 체제에서는 누구나 출신의 귀천을 떠나 엄청난 부와 명예와 정치권력을 얻어 사회의 정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과거의 사회들과 달리 오늘날 세계에서 사람들의 지위는 신이 미리 결정하지도, 법률로 정해져 있지도 않다.

그리고 사법 제도라는 좁은 의미의 정의와 사회 전체라는 더 넓은 철학적 의미의 정의는 근대 문명과 민주적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이론이 그렇다는 것이다. 현실은 매우 다르다. 물론, 현실에서 정치인들이나 대중매체가 사법 제도를 강력하게 문제 삼는 것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다. 최근 캔터베리 대주교[영국 성공회 최고위 성직자]가 이슬람 법전(‘샤리아’)에 대해 한 말[무슬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 샤리아



유전무죄의 상징 이준호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를 적용하지는) 때문에 조성된 히스테리 분위기는 이런 점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물론, 이런 히스테리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주로 역겨운 이슬람혐오증이다. 오늘날 대중매체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슬람혐오증을 추앙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서구의 부르주아 사법 제도가 최상의 사법 제도라는 오만한 생각도 그런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오해하진 마시라. 나는 각종 종교에 근거한 사법 제도를 모두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의 법률 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권력자들이 영국의 법률 제도로 정의를 구현하는 데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듯한 일들이 얼마 전까지도 거의 매주 벌어졌다.

버밍엄 식스[Birmingham Six, 버밍엄의 술집을 폭탄 테러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나중에 무죄로 풀려난 6명], 길퍼드 포[Guildford Four, 길

퍼드의 식당을 폭탄 테러한 혐의로 무고하게 옥살이를 한 4명], 브로드워터 팜[Broadwater farm, 브로드워터 팜 지역에서 경찰의 인종 차별에 반대해 일어난 소요 사태]처럼 이 점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는 몇몇 사건들이 있다. 또, 이런 사건들보다는 덜 두드러지지만 잘 알려진 사례들도 있다.

불평등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된다. 피고인에 대한 대중매체의 히스테리한 보도가 나가고, 경찰의 부패가 드러나고, 이런 부패를 눈감아 주는 법관이 있고, 배심원이 대개 유죄를 선고해야만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럴 때 ‘정의’는 사회 전체의 반영물이다. 부자, 권력자, 국가의 무장력, 대중매체가 상황을 쥐고 흔든다. 결백하지만, 영향력이나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피고인이 된다.

아무리 그래도 왜 이렇게 [이론과 현실이] 서로 다른 것일까? 그것은 체제 자체가 본래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유산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무산자에게 불리하다. 즉, 부자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갇난아기의 사망률에서도 불평등을 경험하듯이,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이 체제는 한 쪽 편을 들고 있다. 부자집 아이들은 귀족 학교에 들어가 잘 교육받고, 자라서는 부와 권세를 얻는다.

이 아이들은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누릴 것이고, 범죄로 희생될 가능성이 적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것이다.

부자들은 탈세하다 걸리면 배째라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급여 부당 수령 “범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난한다.

그렇게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부유해진 부자들은 이 체제에서 사치를 즐길 것이다.

사회의 부를 창출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사람들은 평범한 노동 대중이다. 그러나 노동 대중은 자신들이 창출한 부에서 매우 적은 몫을 가져가는 반면, 소수의 사람들은 다수의 노동 덕분에 막대한 부와 혜택을 향유한다.

물론 몇몇 노동자들은 그물을 통과하듯이 제 힘으로 꽤나 부유해질 수도 있다. 그런 소수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 체제가 만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정의로운 체제라는 환상을 품는다. 살아가면서 대개 그런 환상을 품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법 제도에 대한 환상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돈으로 정의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때때로 신문에 대서특필될 때가 있다. 미국에서 이런 사례로 항상 거론되는 OJ 심슨 사건[흑인 스포츠 스타가 부인 살해 혐의를 받은 사건]은 흥미롭다. 심슨에게 불리한 여러 증거들이 매우 강력한 듯했지만, 주로 흑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심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람들은 격분했다. 미국의 사법 제도

에서 드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오해하진 마시라. 돈을 주고 자유를 산 갑부들은 많았다. 단지 그런 부자 중에 흑인이 드물었을 뿐이다.

그래서 미국 사법 제도의 역사에는 백인이 흑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처벌받지 않는 일이 허다했지만, 가장 유명한 사건이 심슨 사건이 된 것이다. 정의롭지 않은 사법 제도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흑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격분했던 것이다.

여기서 밥 딜런의 노래가 다시 떠오른다. 딜런은 순진하게도 미국의 법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맨 앞에서 제시한 노래는 부유한 백인(윌리엄 랜징어)이 불티모어 호텔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흑인 웨이트리스의 머리를 후려쳐서 살해한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딜런은 미국의 사법 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한지를 대강 노래하고 나서 이 재판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판사는] 아무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바라보았네.

그 자는 어떤 경고도 없이 기문 내키는 대로 살인을 저질렀다네.

법복을 입은 판사는 준엄하고 또렷하게, 벌을 받고 뉘우치기 바란다며 큰 소리로 선고했네.

윌리엄 랜징어. 징역 6개월!

아, 불명예의 의미를 사색하고 모든 두려움을 비난하는 당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세요.

이제 눈물을 흘릴 시간이니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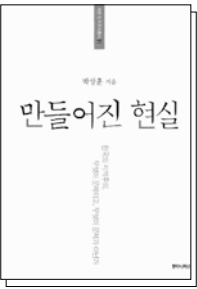
이런 순간은 체제의 고유한 불의(不義)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정말로 극적인 사례다.

참되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려면 참되고 진정한 평등과 자유가 존재하는 사회가 필요하다. 즉, 사회주의 말이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08년 3월호
번역 이종길

서평 | 《만들어진 현실》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어떻게 ‘창조’ 됐는가



《만들어진 현실》
박상훈, 휴머니티스, 260쪽, 15,000원

‘반지역주의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노무현과 호남 지역 차별의 피해자인 김대중의 죽음으로 지역주의 담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명박도 선거 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 개혁을 말하면서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가 지역주의 극복일까? 한국의 지역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이 문제일까? 박상훈 씨의 《만들어진 현실》은 이 화두에 답하는 책이다.

저자는 한국의 지역주의 문제의 핵심이 호남 출신에 대한 차별이며 이것은 박정희 정권이 위로부터 조직하고 계획한 것이라고 밝힌다. 권위주의 정권들이 저항하는 집단의 단결을 해치고 분열지배하기 위해 지역주의를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하층 계급의 저항이 확산되면서 호남 출신인 김대중의 영향력이 강력해지자 1971년 대선 직후 박정희 정권은 반호남 지역주의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 전형적인 사례는 1980년 광주항쟁 시기에 나타났다. ... 부마항쟁과는 달리, 유독 광주항쟁에 대해서는 호남의 지역 정서를 불러들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호남에 대한 편견은 ‘발견’ 되었고 ...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갖는 것으로 ‘창조’ 되었다.” 하지만 “농업에 기반을 둔 ... 조선시대에, 특별히 호남의 과다 수취를 보여 주는 증거는 없다. 민란의 발생 빈도는 호남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전반대로 영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저자는 “호남 지역주의가 비호남의 반호남주의와 같은 차원으로 대비될 수는 없”다며 호남 차별 지역주의는 이로부터 이득을 얻는 권위주의 정권의 책임이지 유권자들의 탓이 아니라는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낸다.

또 저자는 권위주의 시절조차 선거에서 집권당의 지역주의가 한국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사회 통념도 반박한다. 민주화 이전의 선거 결과 추세를 보면 반호남 지역주의가 영남 지역 특히 영남의 도시 지역에서 야당 지지의 증가를 막지 못했다며 집권당의 지역주의의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민주화 이후에도 지역에서 한 정당의 득표 독점성도 끊임없이 유통해 왔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2004 총선에서 호남 지역의 선거 시장을 독점했던 열린우리당이 그 이후 지배력을 상실한 사례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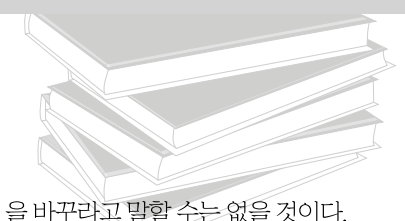
저자는 이념 정책을 둘러싼 정당 간 대립이 분명하지 않은 선거에서는 표의 지

리적 분절성이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정책 이념 정당 체제가 대안이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념 정당이나인데, 저자는 김대중 정부 들어 반호남 지역주의는 더는 한국 정치가 해결해야 할 중심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조선족과 이주 노동자 등 우리 사회 최저층을 이루고 있는 가난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서는 저자가 어떤 정당을 가르키는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만약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선거에서도 계급 투표를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면 적극 지지할 일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을수록 지역주의에 동조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호남 차별은 사라졌을지라도 호남인들이 억압당하고 차별받은 경험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고 영남 출신 지배자들이 민주주의 운동을 억압한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저자의 주장처럼 단순히 ‘저항적 지역주의’ 답론도 문제이므로 인식



을 바꾸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을 바꾼 계기는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자본가들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울 때였다. 1987년 6월 항쟁과 그후 노동자 투쟁을 통해 출신에 상관없이 서로 연대하면서 조직 노동자들 속에서 지역차별 의식이 약해졌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 요구들이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념과 정책 정당의 차이를 더 뚜렷하게 하는 동력은 아래로부터 운동이다. 저자에게 이 관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약화시킨 선거 결과를 분석할 때 아래로부터 운동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 약점이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이 책은 민주주의 투쟁을 억압하고 지역차별을 계승한 한나라당의 이명박이 지역주의 극복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일인지를 알게 해 줄 것이다. 한국의 지역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김은영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 (주) 레프트메디아: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 보복 해임과 학생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

최근 중앙대는 이미 사문화한 겸임교수 자격 요건을 들어 진중권 교수에게 재임용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명박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 온 진보 지식인 진중권 교수에게 보복을 한 것이다.

중앙대 총장 박범훈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기념 한나라당 강연회에서 자신의 여제자를 지목하며 “요렇게 생긴 토종이 애기 잘 낳고 살림 잘하는 스타일 ... 사실 감칠맛이 있습니다” 하고 발언해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했다. 당시 진중권 교수는 이 발언을 거침없이 비판하며 “자르세요, 잘릴 테니까” 하고 말했다.

또 박범훈 총장은 광주 학살을 저지른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식에 쓴 곡을 작곡하기도 했고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과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일관되게 권력에 붙어 중앙대 총장의 자리까지 오른 것이다.

지난 8월 17일 학교 측의 진중권 교수 재임용 불가 방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학교 본관 앞에서 열렸다. 총학생회,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문과대 학생회, 대학생 다 함께 중앙대 모임 등 40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규탄 성명서를 읽고 학생들은 총학생회장을 선두로 학교 본관에 있는 총장실에 들어가 항의의 표시로 벽에 레드카드를 붙이고 3분 정도 머물다 총장실을 나왔다. 그러자 학생지원처는 독문과 학생 4명(이중 1명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과 총학생회장, 대학원



사진: 진중권 교수 재임용 불가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



앞으로 학내의 자치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학교 당국의 탄압임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대학생 모임 등도 적극적으로 징계 당사자 학생들을 방어했다.

징계 당사자인 독문과 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징계 운운 하다가 한방에 훅 간다’, ‘진중권 교수의 재임용을 요구

합니다’ 등 탄압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팸플릿을 내걸었다. 한 학생은 박범훈 총장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수는 내치고, 학생들이 반대하는 K교수(제자를 성폭력한 혐의로 학교를 떠났다가 박범훈의 비호로 복직하려고 함)는 받아들이려 한다면 연대를 더욱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징계 대상자들은 학교의 온갖 압박(학교는 해당학과 교수에게 압력을 넣어 징계 당사자들을 위축시키려 했다)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옳았고 징계는 부당하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처음 네 단체에서 시작한 비대위에 열두 단체가 추가로 참여(현재 일곱 단체가 참여를 고려중)했고, 졸업생들도 다시 학교 게시판을 찾아 독문과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글을 쓰고 있다.

학생지원처장은 “총장이 많이 화가 났다. 내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이번 징계 시도가 총장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고무줄 ‘원칙’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금 흑석동에는 두 중앙대가 존재한다. 하나는 이명박 정부에 아부하고, 진보적 교수를 학교에서 쫓아내고, 학생들의 자치권과 수업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박범훈 총장의 부끄러운 중앙대다. 또 다른 하나는 학교 본부의 온갖 치졸한 탄압과 징계 방침에 맞서고 있는 학생들과 그들을 지지하고 ‘의’와 ‘참’의 전통에서 있는 학생들의 중앙대다.

신동의 대학생들 함께 중앙대 모임 회원

새로운 파업 물결이 이집트를 뒤흔들다

공무원·방직·우체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서 이집트 거리가 다시 한번 시위 참가자들로 가득찼다. 앤 알렉산더는 이집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떻게 정치적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는지 보도한다. 앤 알렉산더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이자 중동 문제 전문가이며 <<이스라엘, 제국주의, 팔레스타인 항쟁>>(다함께)의 저자다.

8월 11일 이집트의 재산세 징수 노동자들은 파업을 선언하고 카이로 시내 후세인 헤가지 가(街)에 집결해 복지 기금 조성 약속을 어긴 재정부 장관을 규탄했다.

징수 노동자 2천 명은 플래카드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복을 두드리면서 거리를 행진했다. 여성 활동가들 — 일부는 나깅[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면사포]을 착용했다 — 이 구호를 선창했다. 7월 말 재정부 장관은 재산세 징수 노동자들에게 퇴직시 1백10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징세 노동자 대다수가 속한 독립 노조(RETA)가 [퇴직금 지급에 쓰일] 복지 기금을 관리할 것이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재정부 장관은 약속을 어기고 기금 관리를 부패한 어용 노조에 넘겼다. 독립 노조 활동가들은 신속하게 전국적 시위를 벌였고, 8월 11일에는 파업에 돌입했다.

독립 노조는 투쟁 속에서 탄생했다. 2007년 12월 징세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

이고 후세인 헤가지 거리를 12일 동안 점거해 3백25퍼센트 임금 인상을 따냈다.

징세 노동자들의 파업 위원회가 1950년대 이후 이집트 최초의 독립 노조의 주춧돌이 됐다. 현재 독립 노조는 어용 노조가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는데도, 조세기관 피고용인 5만 5천 명 중 4만 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실업

징세 노동자들은 이례적인 사례가 아니다. 그동안 쌓인 노동자들의 분노는 지난 몇 주 동안 노동자 수천 명이 국가 또는 고용주와 공개적으로 전면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표현됐다.

7월 20일에 우체국 노동자들은 카이

“

노동자들의 요구는 제한적인 경제적 요구에서 회사의 재국유화 등 대단히 정치적인 요구로 발전했다. 처음에 노동자들은 대통령 무바라크의 사진을 들고 행진했지만, 나중에는 정부를 공격했다.

”

로에 있는 중앙우체국 건물 앞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노동 조건 악화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집트의 저명한 블로거이자 활동가인 호샤 엘하말라위는 방직 산업 노동자들이 조만간 파업에 돌입할 거라 말했다. 심지어 사법부에 고용된 전문직들조차 연좌 농성과 파업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8월 초 그들 중 1천5백 명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사법부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집트의 한 노동운동 지원단체 보고서를 보면, 최근 파업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는 민간 부문 실업률 상승이다. 세계적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이집트 기업주들의 이익이 줄면서 수많은 이집트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노동 시간이 강제로 단축됐다.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나 직업 안정을 보장받는 경우가 드문 민간 부문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보다 해고 가능성이 훨씬 크다. 특히, 수출 특구는 끔찍한 노동 조건과 노동자 보호 장치의 부재로 악명이 높다.

마할라 알쿠브라의 아블 세베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알라 가말은 <알마스리 알요움>에 꼬박 열두 시간을 일해도 일당이 겨우 11이집트파운드(약 2천 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금 체불 때문에 장기 투쟁을 벌여 온 아블 세베 공장 노동자들을 비롯해 수출 특구도 파업 물결에 휩쓸리고 있

다. 8월 12일부터 아블 세베 공장 노동자 5백여 명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탄타 아마유·석유 회사의 장기 파업에서 어용 노조는 새로운 방해 공작 수법을 선보였는데, 이는 이집트 노동자 운동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탄타는 2005년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에 팔려 민영화된 기업이다. 노동자들은 민영화 이후 노동조건이 나빠지고, 걸핏하면 임금이 체불됐을 뿐 아니라 노조 활동가 9명이 해고되는 등 탄압도 강화됐다고 말한다.

지지

최근 파업 물결이 시작된 이후 최초로, 사실상 1950년대 이후 최초로 어용 노조 연맹이 노동자 행동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심지어 파업 자금도 지원했다.

어용 노조는 그동안 방직 노동자들이 벌인 거의 모든 파업에 반대해 왔다.

‘사회주의연구소’의 하삼 푸아드는 어용 노조 지도자인 사이달 고하리가 개과천선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어용 노조는 운동을 주도하는 척하면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속셈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아니나 다를까, 탄타 파업이 70일째를 맞은 8월 9일 고하리는 수당 지급 쟁점에서 쥐꼬리만한 양보를 얻자 지역 노조 위원회에 파업 중단을 명령했다.

탄타의 활동가들은 이 명령을 거부하고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파켓팅을 시작했고, 전경이 공격해 오자 인근 고속도로를 점거했다.

하삼 푸아드는 탄타 노동자 투쟁의 의의를 이렇게 말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제한적인 경제적 요구에서 회사의 재국유화 등 대단히 정치적인 요구로 발전했다. 처음에 노동자들은 대통령 무바라크의 사진을 들고 행진했지만, 나중에는 정부를 공격했다.”

또, 노동자들이 어용 노조 관리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파업을 지속한 것은 투쟁 과정에서 기존 활동가들의 주도력을 보여 준 것이었다.

그러나 어용 노조 관리들이 ‘지원’하는 척하다 파업을 좌절시키는 시도가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

지난 2주 동안 독립 노조 활동가들은 해고와 체포 등 국가, 고용주, 어용 노조의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이런 탄압에도, 노동자들은 서로 투쟁을 연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징세 노동자들의 성공 사례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국제 연대 활동도 독립 노조를 건설하려는 이집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기자